Revolution

혁명

창간준비

3호

- 희망버스 운동 - 무엇을 할 것인가?
- 사회주의 전면화만이 민주대연합을 잠재울 수 있다!
- 비정규직 없는 세상,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자본주의
- 곽노현 사태와 부르주아 도덕

가칭)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혁명 Revolution

창간준비 3호

· 발행일 : 2011년 09월 30일
· 발행처 :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3가 70번지 3층
· 전화번호 : 02) 6348 – 8318
· 블로그 : blog.jinbo.net /wrp
· E–mail : wrp@jinbo.net
· 값 : 5,000원

혁명

창간준비 3호

목차

창간준비 3호를 내며 4

희망버스 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김명석 6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자본주의 – 양효식 14

사회주의 전면화만이 민주대연합을 잠재울 수 있다 – 고민택 22

비정규직 없는 세상,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 임천용 31

곽노현 사태와 부르주아 도덕 – 김병효 39

유성 조합원 인터뷰 – 엄기준, 엄선주 / 구재보 47

사노위 4차 총회 – 혁명정치를 폐기하고 조직을 유지하다 – 이성효 53

≪혁명≫, 작지만 명확한 원칙과 넓은 전망으로 출발하다 – 이형로 61

[트리폴리에서 보내온 글] 이것은 철저한 민중혁명이다 – 번역 / 양재훈 71

[연재 2] 계급의식과 파시즘의 계급무의식의 대립구조 – 오세철 77

[토론회 발제문] 현 위기와 쇠퇴하는 자본주의 – 양효식 90

[자료] 사노련 항소심 결심공판, 오세철 교수 최후진술문 100

〈혁명〉 창간준비 3호를 내며

자본주의 위기가 세계 동시적인 만큼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선 대중들의 저항과 투쟁도 세계 동시적일 뿐 아니라, 나아가 그 투쟁의 방법까지도 동시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미국 한복판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은 이집트의 타흐리르 광장 점거와 그리스 신타그마 광장 점거, 스페인 푸에르타 델 솔 광장 점거에서 직접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9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은 불평등과 실업, 빈곤 등 자본주의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전 세계의 수천만 노동자들 · 청년들의 상상력을 빠르게 사로잡고 있다. 2008년 광화문과 시청 광장을 점거했던 촛불시위와 비슷한 투쟁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 월가 점령 시위대들이 외치는 요구와 행동 제안은 현재의 자본주의 위기 심화를 반영하듯 촛불시위보다 훨씬 급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금융자본의 상징인 월가 점령만이 아니라 노동자 파업과 작업장의 점유 및 민주적 집단통제, 학교와 교실 점거, 모든 도시와 공공광장에서 총회를 조직해 아래로부터 대중 직접행동을 감행하고자 하는 이 운동은 아직은 정치투쟁과 권력의 문제에서 명확치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현 체제에 대한 대중들의 문제제기와 분노의 수준이 얼마나 깊은지를 새삼 보여주고 있다.

이 월가 점령 운동의 시위대이나 앞선 그리스, 스페인, 영국 등에서 광장을 점거한 '분노한 사람들'이나 모두가 한결같이 기존 정치권과 정당들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표하고 있다. 그들은 언론사들의 카메라 앞에 대고 정당들과 의회, 대의제 민주주의는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기존 정치권과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은 금융자본 살리기와 복지 삭감, 긴축에 반대하는 절대 다수 민중을 전혀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대놓고 정치가들과 국회의원들은 모두 "도둑놈들"이라며 분노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정치가들의 배신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 커서 진보정당의 정치가들조차도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 야유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불신과 분노가 바로 스스로의 직접행동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불러오는 근원이며, 이 직접행동 사상이 급속히 파도처럼 번져가고 있는 근본 배경이다.

한국에서도 기존 정치권과 정당들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미국이나 유럽 못지않게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철수 현상도 그 한 예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불신은 아직 여론조사를 넘어 직접행동으로 분출하지 못하고 있다. 희망버스가 자발적인 대중행동이 중심이 된 운동이었지만, 그럼에도 야권연대가 운동을 주도하고,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로 초점이 이동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좌클릭' 행보의 기만적 실체가 아직 폭로되지 않은 점과 함께,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대중들의 자발적인 운동마저도 선거와 제도정치권으로 몰아가면서 직접행동 분출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어서다. 이들이 현재 국참당 같은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정당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국참당 같은 자본가 정치세력과 손잡는 야권연대(야5당 연대)에 있어서는 한 치의 차이도 없이 모두가 일치하고 있다.

이 같은 야권연대와 민주대연합, 그리고 파산한 진보대통합을 제끼고 자발적인 대중행동을 이끌고 전진할 혁명당 건설이 시급하다. 혁명당이 존재했더라면 희망버스 운동은 위와 같은 광장 점거 같은 보다 전투적인 직접행동으로, 그리고 조직노동자들의 총파업과의 결합으로 확대 강화되었을 것이다. 선거나 제도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스스로의 집단적 힘과 직접행동을 믿고 힘차게 전진했을 것이다.

《혁명》 창간준비 3호를 내면서 이러한 혁명당 건설의 시급함을 거듭 확인한다. 세계 자본주의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대중들의 투쟁은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진보정당들과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들은 오히려 더욱더 우경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혁명적 세력들을 강화하고 결집시켜야 할 《혁명》의 임무가 더욱 막중하다.

가칭)노동자혁명당 준비모임이 10월 29일에 정식 출범하면서 《혁명》도 이번호를 끝으로 창간준비 체제를 마치고 다음호부터는 정식 창간호로 나갈 것이다. 정식 창간호를 낼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는 독자들이 이 창간준비 3호를 통해 판단해 줄 것이라 믿는다. **혁명**

2011년 9월 30일

희망버스운동 - 무엇을 할 것인가?

김명석

"가을 소풍"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5차 희망버스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5차 희망버스가 10월8일 부산에서 1박 2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라는 원칙적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조직화 측면에서는 간담회, 콘서트, 촛불문화제 등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조직방식을 제출하고 있다.

5차 희망버스는 "가을소풍"이라는 명명으로 10월8일 부산으로 향한다

이는 9월초에 있었던 5차 희망버스 전국기획회의에서 참여 단위들의 다양한 입장과 치열한 논쟁, 고민들 속에서 이루어진 4차 희망버스에 대한 내부평가와 반성에 기초하고 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4차 희망버스에 이르는 동안 각각의 국면 정세 속에서 나름의 꾸준한 내부 평가와 반성이 있었으며 그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이후 희망버스의 기조나 슬로건, 전술, 행사 등이 기획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희망버스운동이 전진해 왔다. 이러한 기획단의 노력과 활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운동의 질적 성장과 정치적 의미 · 성과의 측면에 주목해야

하지만 이번 전국기획회의에서 제출한 4차 희망버스에 대한 평가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수세적 입장에서 기술적 실무적 평가에 치중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예컨대 평가와 반성의 지점이 주로 예상보다 저조한 인원동원 측면에만 쏠려 상징성의 부족(김진숙 아이콘에 상응하는), 경찰봉쇄에 대한 대처 미흡, 소통 부재, 자유로운 개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문화행사 마련 등 대체로 양적 규모에 국한된 문제제기에 몰려 있다.

하지만 주된 평가 지점을 운동의 양적 규모 못지않게 질적 성장의 측면과 정치적 의미 · 성과의 측면에 주목해서 본다면 4차 희망버스에 대해 섣불리 성패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4차 희망버스의 기조와 슬로건의 정치적 진화와 관련해서 본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희망버스 운동이 투쟁을 통해 이루어온 정치적, 사회적 성과와 대중의식의 진화발전과 관련해서 본다면 4차 희망버스는 실패한 투쟁이 아니다. 일례로 4차 희망버스의 5천 대중들은 공권력의 물리적인 원천봉쇄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시내중심가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제지와 통제를 비웃으며 기세등등한 가두행진을 벌인 점 등은 적극적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현 정치정세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자발적 대중운동의 성격상 기획단의 실무적 기획력만으로 운동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대중들의 자발적 운동 자체가 주요하게 객관적 정세 요인에 따른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의 잠재력을 끌어 올리고 이후 투쟁을 추동하기 위해선 분명한 정치적 입장 속에서 객관적인 정치적, 정세적 평가와 함께 대중의식의 발전측면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복지프레임 논쟁에서 패한 오세훈, 최측근의 뇌물비리 연루로 레임덕에 깊이 빠져든 이명박 정권은 희망버스운동을 고무하고 추동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 동안 희망버스투쟁을 통해서 대중들은 정치적 각성과 자발적 힘을 꾸준하게 키워 왔다. 반면 박원순 등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문제, 투쟁하는 노동자 대중들의 열망과 동떨어진 민주대연합을 향한 진보정당 통합논쟁과 이합집산, 국정조사를 통한 해결 기대 등은 대중들을 수동화시키며 헛된 기대심리를 부추길 것이다. 이는 5차 희망버스투쟁과 전국 비정규노동자투쟁(10월 22일)을 비롯한 이후 많은 투쟁들에 명암을 드리울 것이며,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 투쟁의 정치적인 측면과 주/객관적인 요인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

로 투쟁의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다가온다.

연대투쟁의 돌파구를 연 희망버스운동

4차 희망버스 뿐 아니라 전체 희망버스운동의 가장 큰 정치적 의미와 성과는 연대투쟁의 기풍을 되살리고 이후 투쟁의 돌파구를 열었으며 무엇보다 단사에 갇혀 있던 정리해고 문제와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정치이슈화 하며 전 사회적 의제로 부각 시켰다는 점이다.

85호 크레인에 올라있던 김진숙 동지와 한진 단사에 자발적으로 연대한 700여 명의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들의 투쟁으로 시작된 희망버스운동은 급속하게 만 명, 만 오천 명으로 대오를 늘리며 조합주의와 수동성에 갇혀 있던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고무하고 투쟁에 결합하게 했다. 쌍차 투쟁 패배 이후로 패배의식에 움추려 있던 노동계급 대중들의 투쟁본능과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상층의 지침 없이도 조직노동자들의 개별적 참여와 미조직노동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관료화된 지도부가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회피하는 가운데서도 한진을 비롯한 재능, 발레오공조, 콜트콜텍, 쌍차 등 투쟁사업장 중심으로 선도적인 공동투쟁단을 결성하고 장기간의 노숙투쟁과 순회투쟁을 벌인 것도 희망버스운동이 일깨워준 자신감이었다. 이러한 공동투쟁의 자신감과 경험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기껏해야 제도정치권(야권연대와 민주대연합)이나 기웃거리며 투쟁을 방기할 때 아래로부터의 수평적 네트워크로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는 작지만 소중한 선례로 남았다. 나아가 정치적, 대안적 상상력을 최대한 키워 공동투쟁 뿐 아니라 공동파업까지 이르도록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5차 희망버스는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가

쌍차, 재능, 발레오공조, 콜트콜텍등 투쟁사업장들 중심으로 공동투쟁단을 결성하고 선도적인 노숙투쟁, 순회투쟁을 벌였다.

속화 되는 시기에 이 같은 선례를 더욱 키우고 확장하도록 해야 한다.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상층 지도부에 기대어 지침에 의한 조직 동원에 기대하기보다는 이처럼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고무하며 어떻게 하면 아래로부터 조직화 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를 실질적으로 압박하여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투쟁하는 노동자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김진숙 동지가 85호 고공크레인에 올라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외로이 싸우며 간절한 연대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은 것은 정작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아니라 자발적 대중들의 희망버스였다. 이후 희망버스운동이 무서운 기세로 발전해 나가며 대중들의 투쟁 압력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아갈 때조차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연대 총파업은커녕 어용 채길용 탄핵마저 머뭇거리며 투쟁의 주변부에 머물렀다. 오히려 희망버스운동의 파이가 커지자 숟가락을 올리려는 정동영을 비롯한 야권연대 세력(이정희, 노심조)과 발맞추어 나갔다. 4차 희망버스를 한 주 앞 둔 시점에 820시국대회를 열어 대오를 분산시키고 그 대회를 민주대연합을 공식화시키는 자리로 만들며 노동자들과 희망버스 대중들의 열망을 짓밟았다. 이런 모습에 실망하여 희망버스 대오에서 자유로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문화 행사에 치중하자는 어이없는 후퇴적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어제오늘만의 일인가! 50만까지 모였던 2008년 촛불대투쟁이 명박산성을 끝내 넘지 못했던 것은 결정적으론 노동자계급이 조직적으로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연대총파업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자야 말로 기계를 멈추고 물류를 멈추고 나아가 세상을 멈출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희망버스 대중이 아무리 전투적으로 가열 차게 투쟁한다 해도 결국 최종 승리를 위해선 조직노동자들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희망버스 대중들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야권연대와 민주대연합에 기대어 투쟁을 방기하고 교섭에 목매다는 모습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투쟁동력을 갉아먹을 뿐이다. 현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정치적으로 분열시킬 뿐이다. 9월24일 민노당 대의원대회에서 자본가정당인 참여당과의 통합을 대놓고 선동하는 금호타이어노조의 기막힌 행태를 보라. 정치적 자업자득이다. 희

한진중공업 이재용 사장과 교섭테이블에 앉은 김호규 금속 부위원장과, 어용 채길용 한진 지회장"– 무급순환휴직, 6개월후 재고용등 수세적 양보 교섭안은 완전하게 폐기되어야 한다

망버스 대중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해 대중의 실망과 환멸이 깊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정투위 동지들이 반대하는 수세적 양보 교섭안(정리해고 철회가 아닌 6개월 후 재고용, 무급순환휴직안)을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조남호도 거부한 교섭 안에 매달리지 말자. 정리해고 철회 요구를 분명히 하고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레임덕에 빠진 지금 정세는 투쟁을 밀어부칠 때 이다. 10월 8일 부산에서 전투적으로 투쟁하는 기운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단결투쟁

희망버스운동은 자본과 공권력의 물리적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거듭하며 대오를 늘리고 굽힘 없는 투쟁을 했다. 이 투쟁은 단순히 대오만 늘린 게 아니다. '소금꽃을 구하자'라는 슬로건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소금꽃이다',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라는 슬로건의 진화, 발전에서 알 수 있듯이 희망버스 대중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김진숙, 한진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닌 자신과 이 땅의 착취, 억압받는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또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은 불가피하다는 진보/보수의 전방위적 이데올로기 공세를 딛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데까지 도달했다.

이러한 대중의식의 발전에는 이윤을 앞세워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대중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자본과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성장을 통한 분배와 안정을 말하는 MB노믹스는 부자들만 살찌우고 대다수 민중들에게 빈곤과 고통만 안겨준 채 여권 내부에서조차 경제파탄의 근원으로 지목되면서 사실상 폐기되었다. 소위 '서민물가 안정'론(MB 물가) 또한 물가상승률이 한은이 예상한 3%를 훌쩍 넘어 5%대에 육박하면서 그 기만성이 실물적으로 폭로되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최저임금 4580원, 서민들을 점점 시 외각으로 몰아내고 있는 전세값 폭등, 대학생들을 사회초년생 때부터 빚쟁이로 만들고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는 1천만 원 대학등록금 등등이 모두 투쟁의 폭발을 위한 가연성 재료로 차곡차곡 쌓이

고 있다.

대다수의 노동자 민중들이 이렇듯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한편에선 우리들의 피와 땀으로 한줌의 자본가들이 곳간을 더욱 늘리고(올해 현대, 삼성의 당기순이익은 5~6조에 이른다) 엄청난 부를 쌓고 있다(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400조에 달하며 대학들의 적립금은 10조원에 달한다). 한진 자본은 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174억 원을 주식배당으로 나눠챙겼다. 그러면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가 불가피했다', '정리해고 철회는 절대 없다'며 자본가계급 특유의 파렴치함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희망버스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가 조직노동자들만의 문제도,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도 아님을, 전체 노동자계급의 문제임을 일깨우고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은 노동자를 비롯하여 철거 영세민, 노점상, 학생,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등 이 땅 모든 피억압 대중과 빈곤 대중 전체의 투쟁일 수밖에 없음을 또한 증언하고 있다.

투쟁만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희망버스운동은 노동자와 빈곤대중들의 결합과 조직노동자와 비정규, 미조직노동자의 단결투쟁의 전망을 열었다.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는 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실질적 투쟁 요구가 되었다. 이 점이 이명박과 전체 자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다. 자본가계급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들의 단결투쟁 확산과 대중의식의 발전, 노동자들의 자신감 고조를 가장 두려워한다. 희망버스운동이 발전하자 이명박과 조중동이 "훼방버스", "절망버스", "부산경제 다 죽인다"며 광분하다가 청문회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1990년 영웅적인 현대중공업 골리앗투쟁은 연대투쟁의 모범이었다. 1만명의 학생,시민이 함께 연대투쟁을 벌였다

국정조사까지 받아들인 것 모두 그러한 두려움의 표현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조남호의 배후에 있는 이명박정권과 전체 자본가와의 투쟁으로 전선을 확장하며 공세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문제 해결이 일차적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 공세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서는 그 과제조차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투쟁의 확장으로 현재 레임덕 상황에서 더 이상 밀리면 더 많은 걸 빼앗길 것 이라는 두려움을 가진 이명박과 전체 자본가들이 조남호의 배후에서 전선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버스 대중들 일부에서 너무 나아갔다고 하는 "이명박이 해결하라"는 슬로건은, 따라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라는 흔들림 없는 전망 속에서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더욱 확고하게 부여잡자. 조직노동자,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민중들의 단결투쟁으로 기세를 더욱 높여야 한다. 5차 희망버스 뿐 아니라 이어질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까지 투쟁의 파고를 높여 나가야 한다. 그럴 때만이 금속노조와 채길용 한진지회의 수세적 교섭안과 국정조사에 기대어 해결하고자 하는 수동적 기대심리와 태도를 단번에 날려버리고 승리의 전망을 움켜질 수 있다.

우리 투쟁의 힘을 믿자. 선거와 야권연대/ 민주대연합에 기대지 말자

투쟁을 회피하는 기회주의자들은 시장 선거와 야권연대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 해보고자 한다. 시민운동 출신의 박원순을 시장으로 뽑는다고,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바라는 야권연대와 민주대연합을 이뤄 선거를 통해 MB 정권에서 민주대연합 정권으로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정리해고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산은 다름 아닌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이루어졌다. 노무현이 "못해 먹겠다"고 고백했듯이 민주대연합 정부도 자본의 이해를 침해하는 어떤 정책도 펼 수 없다. 특히나 현재 같은 자본주의 위기 시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는 자본주의 체제의 사활이 걸린 체제 도전적 의제일 수밖에 없다. 그

"고장난 자본주의",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자본가계급으로부터 독립적인 투쟁만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다른 세상을 만들수 있다

런 요구를 자본가정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대연합 정부가 실시할 것이라고 믿으라는 것은 전경련과 경총이 자발적으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것이라고 믿으라는 얘기나 진배없다.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의 도입은 자본의 축적위기를 고용유연화를 통해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본의 전략이다. 민주대연합 정부는 이러한 자본의 총노선을 거스를 수 없다. 우리들의 강력한 단결투쟁만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다.

지난 추운 겨울 홀로 크레인 입구의 쇠사슬을 끊어내며 외롭게 올라간 김진숙 동지의 투쟁은 잠잠하던 남한사회를 투쟁의 함성으로 들썩이게 했다. 투쟁은 봄, 여름 계절을 훌쩍 넘겨 이제 가을에 이르렀다. 더 이상 김진숙 동지와 한진 조합원들이 또 다른 계절을 맞게 하지 말자. 김진숙 동지와 사수대 동지들이 꽁꽁 얼어붙은 크레인 쇳덩이에서 이번 겨울을 나게 해선 안 된다. 우리들의 투쟁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다른 세상이 가능함을 보여주자. 투쟁!! **역명**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 자본주의

양효식

한 주식 중계인이 초조한 듯 손톱을 깨물며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 세계증시가 폭락하여 8월부터 9월 23일까지 한국 2010년 GDP의 7배에 달하는 약 9,000조원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2008년 이래 거대한 위기에 빠져든 자본주의가 잠시 미약한 회복 기미를 보이더니 명백히 이제 새로운 추락 국면으로 다시 돌입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더블딥',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의 재정위기/국가부도 위기,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심장부로 위기의 '전염', 중국, 브라질 등 모든 신흥국들에서의 급격한 인플레 등, 세계경제의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현상들이다. 그 때문에 국제 금융자본가들의 협의체인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세계경제가 위험한 국면에 진입했다"고 며칠 전 자본가들에게 보고했다. 파국의 서막을 알리는 듯, 세계증시가 폭락하여 8월 초부터 9월 23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 증시에서 7조 4960억 달러(약 9000조원; 한국 2010년 GDP의 7배)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국제 금융자본가들한테 지금 당장 최대의 공포는 2008년 같은 또 한 차례의 '신용경색'이 발발하는 것이다. 그리스가 지금 채무 변제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음에 따라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9월 24일 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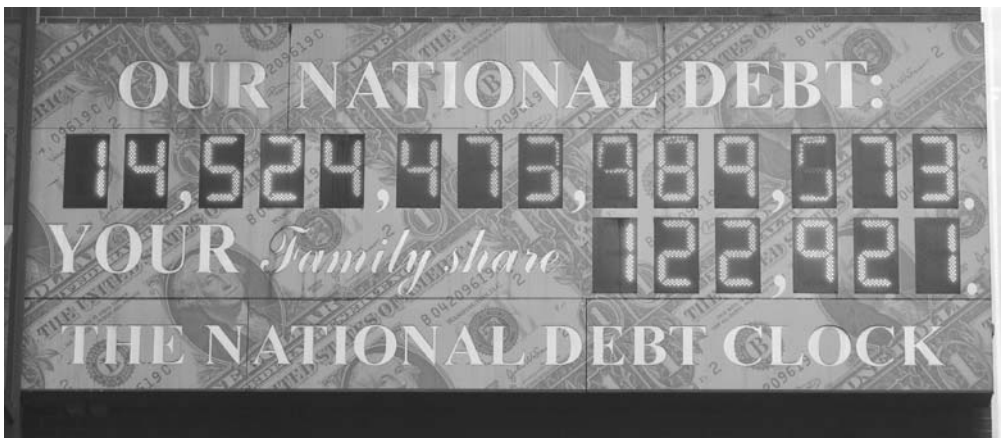
막된 워싱턴 IMF 연차총회에서는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 금융자본가들이 합의 하에 그리스 채무의 일정 부분을 탕감해 주는 "질서 있는 국가부도"(controlled default) 방안을 놓고 논의를 했다. 그러나 이것이 각각의 금융자본가들(채권 보유 은행들)에게 저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위험성을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끝났다.

더 확대된 규모로 2008년의 재연?

그리스 부도 사태가 '해결 불가능'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는 소식은 직접 연루된 은행들 한테만 암담한 뉴스가 아니다. 2008년 때처럼 파생금융상품의 형태로 이 그리스 국채의 일부가 포함된 채권을 매입한 은행들이 많다. 은행들의 영업비밀 때문에 그 매입한 채권 가운데 어느 것이 아직 지급능력이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이 부도 또는 부도 위험에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 때문에 대출이 보류되고, 금리를 포함한 대출 비용이 급등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탈리아 같은 부도 위기 최 일선에 서 있는 나라들의 채무 변제 능력이 더욱 더 위협받고, 이들 나라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지급능력도 큰 타격을 받게 될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전염병'이 유로존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취하고 있는데, 2008년 국가가 은행을 살렸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은행만이 아닌 국가들의 지급능력까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자본가들을 공황장애로 몰아넣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점점 더 마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현재 14조 3천억 달러인 상황에서 오바마가 인프라 프로젝트(도로, 교량, 홍수방제시설 등)에 대한 정부 지출을 통해 불황을 타개하려고 하자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증세 반대를 내걸고 오바마와 대결 전선을 치고 있다. 공화당은 사실상 법인세, 소득세 삭감 등 부자 감세와 정부지출 삭감을 원하고 있다. 공식 실업률이 9%를 넘어서고 있고(1,390만 명) 경제가 재침체로 돌입하고 있는 마당에 공화당이 이런 '강경 노선'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으니 총자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들 정치권이 서로 싸우면서도 또 한



5월 16일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 인근에 있는 국세청 벽에 있는 전광판에 미국 연방정부 부채액 14조 5244억 7398만 8957달러와 가구당 부담액 12만 2921달러가 표시돼 있다.

번의 신용경색이 도래할 상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대파국의 그림자가 앞에 어른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럼에도 이미 정치권 일각에선 "그냥 내버려둬라"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경제에 너무 개입하지 마라. 은행까지 포함해서 도산 기업들은 죽게 놔두라. 그러나 미국 · 유럽의 서방 대형은행들은 말 그대로 "죽기에는 너무 크다(대마불사)." 서방의 은행망은 생산과 세계무역의 중추신경망이다. 따라서 이 망이 돌아가지 않으면 단지 그냥 멈춰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활동이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는 진실로 파국적인 공황을 가져올 것이다.

은행들은 지금 국가들 자체가 준 파산 상태에 있으므로 2008년 때처럼 다시 또 구제될 수가 없다. 현재 그리스의 위기 자체만 놓고 보면, 이 같은 소규모의 위기는 부채를 무효화하고 은행 자본을 전면 재편하는, 예를 들어 일정 국면 동안이라도 모종의 부분적인 국가소유 형태로 재편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로 남는 것은, 서방 경제가 부채로 목이 졸리고 있고 이 "독성 신용자산"이 채무불이행과 부도를 통해 파괴될 때까지는 파국이 단지 유예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 위기를 1930년대 세계대공황 이래 최악의 위기라고,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 위기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조차 자본가계급이 해결책을 찾는다면 아마 2008년에 썼던 전략의 변종 같은 것일 것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차례대로 빌려서, 이번에는 단지 개별 은행들이 아니라 국제 은행망이나 국가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어떤 개별 나라도 그 같은 거대한 자금을 모아낼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국제적으로, 예컨대 IMF를 통해 동원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중국의 보유자산이 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탕에 깔린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지만, 국제정치 역학상에 심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고, 조만간 전 세계적인 규모로 훨씬 더 큰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다.

자본가계급의 파산한 이론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왜 위기가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해결책'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그들의 양대 학파가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이다. 둘 다 체제를 구해 보겠다고 하는데, 결론은 모두 노동자계급에게 위기를 떠넘기는 것이다.

통화주의자들은 긴축을 재촉한다. 그들은 국가 지출을 삭감하길 원하고, 경쟁력 없거나 수익성 없는 기업은 망하도록 놓아두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들은 공공서비스라는 개념을 증오하며, 부자 감세를 요구한다. 그들은 자본가들과 부자들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돈을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억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장 보더라도 통화주의자들의 긴축 조치(대폭 삭감)는 불황을 더욱 깊게 만든다. 소비할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적어져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수요를 더욱 위축시킨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수익성 없는("비효율적인") 기업들과 공공서비스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끌어내림으로써 이윤을 회복하고자 한다.

반면 케인스주의자들은 공공 지출과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개인들과 기업들이 너무 많이 저축을 해

서 투자가 고갈되기 때문에 불황이 일어난다고 믿는다. 그들은 불황 타개를 위해 돈을 풀고, 일자리 창출과 개인들의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차입해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런 조치는 인플레를 가중시키는데,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국채 보유자들(국가들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주들, 즉 국제 금융자본가들)이 국가부채를 줄이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금융자본가들의 이러한 부채 감축 요구는 지배계급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을 또한 야기한다.

맑스주의자들은 케인스주의적인 해결책을 지지하는 개량주의적인 노동자들과 손잡고 함께 싸우는 것을 물론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사악한 의료 · 교육비 및 연금 · 임금 삭감에 반대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지출에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위기 전가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인플레에 반대한다.

러시아의 혁명가 트로츠키는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를 묘사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실업인가 인플레인가, 칼인가 독인가."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는 체제의 문제들을 풀 수 없는, 위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피상적인 설명들이다.

이와는 달리 맑스주의자들은 일자리를 위한 국가지출 요구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 은행을 몰수 국유화하고 노동자 통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윤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에 따라 투자를 배치하는 수단으로 은행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리는 억만장자 금융자본가들에 대한 국가채무 이행을 거부할 것이며, 부유세를 도입하고 물가 인상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자동으로 인상하는 물가–임금 연동제를 도입할 것이다.

금융자본가들의 투기자금을 몰수하고 재벌을 몰수 국유화하면 실업과 인플레, 빈곤과 불평등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산을 조직할 수 있게 된다. 그것으로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 –– 인민의 필요를 위한 계획된 생산이 아닌 이윤을 위한 생산 –– 을 뿌리 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항에서 혁명으로!

노동자들이 '고통 분담' 등 위기의 대가를 대신 치르려고 하거나, 그냥 앉아서 자본의 위기를 전가 당하거나 하는 한 자본가들은 아무리 심대한 위기라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과거 레닌이 말한 것처럼 계급투쟁으로 매개되지 않는, 자동붕괴로 치닫는 무매개적인 위기 같은 것은 없다.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이 뒤집어쓰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본가들과 정치가들이 바라는 바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량실업(9월 26일 파리에서 열린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제출된 공식 통계만 보더라도 2008년 위기 이후 주요 20개국에서 2천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비정규직 · 불안정 노동 양산 △임금 삭감 △공공 교육 · 의료의 종식 및 민영화 △복지 지출의 대폭 삭감 등등. 지자체로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팔아치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민영화(사유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자본가 국가의 폭력성도 전 세계적으로 노골화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이 지구의 생산력을 결딴내고 파괴하는 그 능력을 지금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라 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위기를 해결할 방안도 다시 우리들의 의제와 일정에 바로 올라 올 수밖에 없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저항과 반격의 불길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솟구치고 있다. 이 저항과 반격을 묶어서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투쟁을, 은행을 몰수 국유화하고 노동자 통제를 도입하는 공세적인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대신할 유일 가능한 대안이자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사회주의를 다시 우리 정치투쟁의 중심 의제로 올려놓아야 할 때다. **혁명**

그리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보여주는 부동산 특별세가 의회에서 가까스로 통과한 27일 시민들은 거리에서 거센 시위에 나서고 있다

칠레 학생들은 수말마다 수십만명의 규모 아래 무상교육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해 왔다

28일 포르투갈의 경찰 1,500여명이 리스본의 재무부 청사 인근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시위를 하고있는 경찰관들은 이날 자신들의 봉급을 삭감하는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며 일반인 시위대와 함께 시위를 벌였다

9월 7일 이탈리아 로마 시내가 온통 빨간 깃발로 뒤덮였다. 베를루스코니 총리 정부의 재정긴축안에 반대해온 노동계의 총파업 시위다.

최근 미국의 월가 점거운동이 벌여졌다.

그리스 위기, 왜 해결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리스 경제는 유럽연합(EU) GDP 가운데 단지 2%를 점할 뿐이다. 만약 EU가 미국처럼 단일한 경제적 실체라면 자금을 일부 이전하여 그리스 채무를 갚아버리는 것은 미 연방정부가 카트리나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파괴된 뉴올리언즈주의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에서 걷은 세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결코 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유럽이 단일 통화와 중앙은행은 가지고 있지만, 중앙집권화된 정치적 의사결정 기구도 공동의 조세제도도 못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유럽 경제는 점점 더 통합되어 가고 있고 더 큰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유럽 사회와 정치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개개의 민족국가들이 얼기설기 엮인 낡은 연결망 속에 여전히 고착되어 있다. 민족국가 체제가 어떻게 자본 축적의 요구들과 충돌하고 생산력을 갉아먹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이다.

그리스 위기는 이 모든 모순을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보여준다. 지난 7월에 EU 각료회의는 그리스 채무 보증을 위해 EU 전체로부터 재정을 동원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설립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출범하기 위해서는 EU 내 각국 의회들의 승인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12월이나 되어야 최종 결론이 날 것이다. EU의 소국인 슬로바키아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4개 정당 가운데 가장 작은 정당 하나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총선에서 연립정부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단순히 과거로부터 내려온 잔존물이라기보다 지배계급들이 서로 경쟁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에 걸친 유럽통합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유럽 자본가계급 같은 것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일치된 세계관과 정책은 고사하고 말이다.

독일 부르주아지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그리스 사태를 놓고 현재 분열되어 있

다. 이제 그리스는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므로 "질서 있는 국가부도"로 가야 한다고 믿는 분파가 있다. 다른 하나는 유럽중앙은행과 좀 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분파로서, 그리스 부도가 독일 은행에 타격을 미칠 것을 두려워하는 축에 속한다. 그럼에도 전체로서 독일 부르주아지는 구제기금에 대한 대가로 남유럽에 긴축 조치를 부과하는 데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 긴축 조치가 야기할 급격한 경기침체가 독일 다국적 기업들한테는 뻗어나갈 유리한 기회를 조성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의회가 29일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대출 여력 확대와 역할 강화 방안을 승인하고 기뻐하는 모습

당연하게도 다른 나라 지배계급들은 이 같은 독일 헤게모니의 확대를 두려워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체제는 전 세계에 걸친 격렬한 경쟁 압력에 또한 발이 묶여 있다. 지배계급들은 은행에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쏟아 붓고, 재정적자를 가져온 경기부양책을 거듭 시도하면서 이제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거의 다 써버렸다. 그리하여 국제 경쟁으로부터 자국 산업과 은행과 시장을 보호하는 쪽으로 선회할 위험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과거 1930년대의 대공황 때 보았듯이 이러한 보호주의는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당시 다른 국가로부터 시장을 빼앗기 위해 정치 ·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강력한 경제적 압력이 바로 이 보호주의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때문에 IMF 같은 기구들의 글로벌 정책 입안자들은 이 같은 결말을 피할 수 있도록 G20 같은 기구를 통한 소위 질서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고자 애를 쓴다. **혁명**

사회주의 전면화만이 민주대연합을 잠재울 수 있다.

- 진보대통합에 드리워진 왜곡과 허위 -

고민택

자본주의 세계는 지금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누구의 눈으로 보더라도 지금 세계는 대격변의 시기로 들어서 있다. 적어도 지난 한 세대 동안 세계를 풍미했던 일체의 사상과 이념을 포함해 지구촌 사람들이 '그러려니' 생각했던 통념으로는 현 시기 몰아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다. 이 점에서는 지배계급이든 피지배계급이든 다르지 않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모두 지금 위기의 소용돌이로 빠져 들고 있다. 지배계급 자신도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지배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피지배계급도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정치적 전망과 구체적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는 앉아서 고스란히 고통과 희생을 맞을 수밖에 없다. 누가, 어느 계급이 세계를 장악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지금 눈앞에서 피터지고 피 말리는 미증유의 대립과 갈등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지금 세계는 사실상의 전쟁 상태, 그것도 부분적, 지엽적이 아닌 총체적인 전쟁 상태에 돌입해 있다.

격변하는 세계

미국의 패권도, G20을 통한 공조로도,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으로서도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지탱하거나 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폭로되고 있다. 어느 특정 지역, 특정 국가도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세계가 단지 금융으로만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세계)화 훨씬

이전에 이미 생산의 세계화, 시장의 지구화에 진입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생태계는 이미 지구적 차원에서, 아니 오직 지구적 차원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은 자기 홀로, 완결적으로 운동할 수 없다. 자본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운동을 보장해주는 상부구조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국가, 부르주아 국가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자본은 반드시 국적(단일 국가든, 연방/연합국가든)을 가져야만 한다. '초국적'자본이라는 말도 국적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 걸쳐 있다는 표현이지만 그렇더라도 반드시 모국을 필요로 한다. 자본의 상부구조, 즉 국가는 분할되어 있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세계(단일)국가는 불가능하다. 자본은 이미 지구를 단위로 운동(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부구조를 지구 차원에서 가질 수 없는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이 모순이 지금 세계적 차원에서 폭발하고 있는 중이다. 북아프리카, 중동, 유럽(연합)에서 나타나고 있다. 위기 전가를 둘러싸고 국가(자본) 사이의, 더 근본적으로는 계급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의 격랑이 몰아치고 있는 중에 지금 한국사회 한쪽에서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른바 '진보대통합(당)' 이야기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아무리 한국사회가 거쳐 온 지난 역사와 구체적 현실을 감안한다 해도, 특히 앞에서 이를 이끌고 있는 세력(정파)과 인사들이 보이는 행태는 안일한 역사인식, 한가한 정세인식 나아가 부패하고 왜곡된 계급의식이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뿌리

사실 민주대연합이든, 진보대통합이든 통

9월4일 진보신당 당대회에선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합의문이 부결되었다.
하지만 진보대통합을 향한 당내 통합파들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를 주축으로하는 진보신당 탈당파들은 "통합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시적으로 보면,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한 번쯤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간주하고 넘어갈 수 있다. 물론 그것이 끼친 폐해는 고스란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 그 폐해를 다시 주워 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면 너무도 고통스럽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진보신당 당대회와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결정되거나 정리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제 각각 아전인수 식 해석을 해대고 있는가 하면 또 다시 그것들을 추진하기 위해 암중모색에 들어가 있을 뿐이다. 누구라도 2012년 총선과 대선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어쨌든 겉으로 진보대통합은 일단 좌초했다. 또한 다시 추진되더라도 적어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포함하고 거기에 더 덧붙이는 방식의 진보대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진보대통합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진보대통합 성사를 통해, 그 속에서 정치적 모색을 하고자 했던 조직(단체)의 의도도 전부든, 부분적으로든 타격을 입었다.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 결과를 놓고 그것을 성과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겠으나 그들이 능동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정치력은 거의 없다. 그저 거기까지다. 민주노동당이 참여당과 통합되는 것은 분명 역사적 퇴보다. 그러나 확인된 것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명분과 힘 모두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이다. 누워서 침 뱉기거나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 진보대통합론자들 중에도 민주대연합을 배제해야 한다는 부위와 '선' 진보대통합을 말하는 부위가 섞여 있다. 전자는 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후자는 단지 전자를 활용하거나 묶어두고자 할 뿐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과정을 통해 또 하나 확인 된 것은 이제 민주대연합을 부정하는 진보대통합론자들의 추진력은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설령 민주노동당 당권파(주류)가 진보대통합을 어떤 형태로든 받는다 해도 주도권은 여전히 그들에게 있다. 그렇다고 진보대통합론자들이 민주노동당을 배제하고 선 진보대통합을 말하는 세력을 규합해 독자적으로 정당을 구성할 수도 없다. 명분도 세력도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럴 능력이나 의지가 애초에 있지 않았다.

진보대통합은 처음부터 자가당착에 빠져 있었다. 만약 민주노동당 전부를 떨쳐 낼 의사가 없었거나 민주노동당 일부라도 규합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갖지 못했다면 진보대통합은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이 진보대통합에 응했던 이유가 바로 민

민주대연합과 진보대통합 사이에 경계와 차이를 두려는 것은 허상일 뿐이다

주대연합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진보대통합의 실질적인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신당의 주류 역시 시차가 문제일 뿐 민주대연합을 받아들일 각오(?)가 돼있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당권파와 진보신당 주류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대통합이 좌절된 것이 아니라 민주대연합의 수순이 달라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현 사태의 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대연합과 진보대통합 사이에 경계와 차이를 두려는 것은 허상일 뿐이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뻗은 두 가지이다. 논리적, 정치적 근거를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다. 그 둘은 이미 물적, 구조적, 역사적으로 끈끈하게 묶여 있다. 민주노동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본가 정당과 결별한 적이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이면에서는 그들 정권의 협력자 역할을 하거나 그들 정권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얻고자 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명박 정권 이후로 이러한 행태는 더욱 노골화, 전면화 되었다.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진보양당은 '야권연대' 혹은 '반MB연대'라는 이름으로 자본가 정당과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켜 나갔다. 이 점에서 진보대통합과 민주대연합 사이에 실질적 차이는 없다. '야권연대'는 그들 모두에게 상수다. 다만 2010년 6. 2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주대연합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도가

달라졌을 뿐이다.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진보양당이 더 목을 매고 있다. 쌍차투쟁, 현대차비정규직 투쟁,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투쟁 등에서 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노동자계급의 투쟁 역량을 강화하기보다는 정반대로 '야권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약화시키는 행태마저 주저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참으로 가관이다. '야권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고 처지를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세상에 노동자의 투쟁을 약화시키면서 어떻게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고 처지를 개선할 수 있단 말인가?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 내에서 진보대통합과 민주대연합을 놓고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념적, 노선적, 전략적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다. 단지 이해관계의 차이, 정치적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동과 혼란에서 나오는 차이일 뿐이다. '야권연대'의 논리적, 현실적 귀결점은 '연합정권'이다. '연합(공동)정권'을 염두에 두지 않는 민주대연합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대연합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보대통합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진보대통합과 민주대연합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말장난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노동당 배제를 불사한 이러저러한 형태의 '진보재구성'도 그것이 진보정당 맥락을 고수하고 있는 한 진보대통합론자들과 질적 차이를 가질 수 없다. 기껏해야 정치적 아마추어리즘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진보재구성'도 진보대통합과 민주대연합 자장 안에 있다. '새노추'의 '새로운'은 '새통추'의 '새로운'과 다를 게 없다. 둘 모두 '탈노동', '탈계급'을 바로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통추'가 주로 세력을 우선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비해 '새노추'는 가치를 중시한다고 하는데 '새노추'가 말하는 가치가 다름 아닌 '탈노동', '탈계급'이다. 둘 모두 '민주노총당', '운동권당'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물론 '민주노총당', '운동권당'이라는 개념과 현실에 극복할 요소가 분명 있다. 그러나 그들이 부정하는 맥락은 똑 같이 '탈노동', '탈계급' 맥락에서이다. 단지 하나의 조직을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것만이 그들 사이의 차이일 뿐이다. 이들이 자력으로 의미 있는 정치세력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역사의 복수와 대중의 역 반란

민주대연합이든 진보대통합이든 그들이 말하는 근거는 대중이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미리 말해두지만 이것이야말로 대중을 속이는 것이자 대중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대중이 요구하고 있고 바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환멸과 무관심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준다. 대중이 기존 정치행태에 신물을 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진보세력 상층인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야권연대에 목을 매고 있다.

라고 있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며 고통을 강요하는 현실을 끝장내야 한다는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안철수 현상을 통해 극적으로 표출된 것도 바로 이점이다.

그 어떤 논리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중에게 비친 다양한 형태의 진보세력(진영) 상층 인사들은 더하거나 뺄 것 없이 모두 부르주아 정치권, 기존 정치권의 일원이다. 그들의 지난 이력, 그들이 말하는 온갖 정치적 언사는 대중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진보대통합, 민주대연합 할 것 없이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대중에게 완전히 무시, 외면당했다. 안철수 현상은 특히 진보세력에게 대중이 가하는 역 반란 성격을 짙게 내포하고 있다. 자승자박이 딱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대중이 그토록 무시하고 외면하는 기존 정치질서에 들어가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 그들은 거꾸로 호소한다. 자신들은 아직 기존 정치에 온전히 편입되지 못했다고. 대중이 이미 기존 정치권, 기존 정치질서, 기존 정치행태에 신물을 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진보대통합이나 민주대연합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은 대중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다. 그것만이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기존 정치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스스로 그러한 정치 지형과 정치 구도를 만들어 놓고 대중들로 하여금 그것이 마치 대중 자신의 것인 양 강제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고는 다시 그것이 대중의 뜻이라고 둔갑시키고 있을 뿐이다. 대중이, 노동자가, 민중이 원하는 것은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끝장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대 그 가능성을 기존 정치권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안철수 현상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대중이 혁명에 나설 태세가 갖춰졌다는 것이 아니다. 아직은 안철수를 통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중 탓이 아니다. 대중이 놓여(갇혀)있는 정치 지형과 정치 구조가 대중들로 하여금 자기가 자기를 배반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대중은 이명박을 택했다. 마치 노동조합에서 온건파와 강경파 지도부를 대중이 정세에 맞게 선택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미 대중과 기존 조직(정당이든, 노동조합이든, 시민단체든)지도부 사이에는 냉정한 실리적 계약 관계가 구조적으로 짜여 져 있다. 서로를 믿지 않고 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정치적 공감대도 없다. 모든 것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다. 그것을 서로가 용인하고 있다. 안철수 현상이 뒤집어진 이명박 현상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기존 부르주아 정치권에 대한 반발일 뿐 진보대통합이나 민주대연합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중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대중이 진보대연합, 민주대연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설령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 않아서다. 물론 자본주의가 위기 속에서도 잠깐잠깐 경기 상승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보대통합, 민주대연합도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권은 물론 진보정당에게도 대중이 가하는 역사적 복수다. 대중의 이런 선택을 탓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현재로서는 없다.

새로운 국면

진보대통합이든 민주대연합이든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가 끝난 후 마치 철지난 바닷가에 쓰레기만 덩그러니 남은 것처럼 개인들의 갖은 원망과 한탄만이 나뒹굴고 있다. 정작 여기에 응답해야 할 책임 있는 인사나 세력들은 침묵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가 저지시킨 것은 참여당과의 통합이 아니다. 진보신당 당대회와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가 남긴 것은 노동자계급을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도 이런 행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니 더욱 기를 쓰고 달려들 것이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노동자계급,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지금은 새로운 국면이다. 물론 노동

9.25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에선 국참당과의 통합이 부결되었다.이로써 진보대통합과 민주대연합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자계급이 진보대통합 좌초를 반겨야 할 근거는 미약하다. 진보대통합을 어렵게 몰아간 세력이 다름 아닌 민주대연합 세력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은 진보대통합과 민주대연합을 패퇴시키기 위한 운동과 투쟁을 벌이지 못했다. 그럴 수 있는 조직적, 정치적 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한 때문이다. 사실 진보대통합과 민주대연합이 기승을 부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렇다고 실망할 이유는 없다. 아니 실망할 겨를이 없다. 말했듯이 진보대통합이든 민주대연합이든 결코 멈추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지금부터야말로 개량주의 지도부와의 지도력 다툼을 위한 투쟁을 전면적, 본격적으로 벌여 나가야 할 때다.

진보대통합이든 민주대연합이든 그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를 전면화 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진보대통합으로 민주대연합을 꺾을 수 없다. 진보대통합이야말로 민주대연합으로 나가는 관문일 뿐이다. 진보대통합이 오히려 민주대연합에 의존하고 있다. 참여당과의 통합을 저지(?)하는 것으로 진보대통합의 올바름과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대연합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진보대통합을 먼저 부정해야 한다. 진보대통합을 부정하는 단 하나의 방안은 사회주의를 전면화 하는 길 뿐이다. 개량주의 지도부는 노동자계급에게 아직 그럴 힘이 없다고 말한다. 노동자계급이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말하기 앞서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

대중을 말하기 전에 그들 자신이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하거나 심지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백번을 양보해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진보대통합, 민주대연합은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로 나가는 경로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사민주의, 의회주의를 통한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서구 사민주의 정당의 역사가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지금 당장 전 세계 사민주의 정당의 모습을 보라. 거기에 그 어떤 가능성이 남아 있는가? 오히려 그들 정당이 앞장서 노동자계급을 자본주의 체제 내에 묶어두고 있지 않은가! 이 나라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아니 어느 나라든 근거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역으로 묻는다. 그렇다면 그 길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방법은 있다. 우선 그들 자신이 현재의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자계급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혁명정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혁명정당 건설을 통하지 않고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자계급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방안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우회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혁명정당 건설이 가능하냐고? 우선 진보대통합, 민주대연합이 바로 그 가능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부터 보아야 한다. 진보대통합 논의 과정에서 서로들 자신들은 혁명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앞 다퉈 말하는 어이없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능하냐는 것도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떠나 말할 수 없다. 스스로 혁명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공공연히 말하면서 가능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허구다. 물론 가능하다. 혁명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정치활동, 조직활동을 일관되고 끈질기게 펼쳐나가는 것이다. 벌어지고 있는 대중투쟁을 진보대통합, 민주대연합을 위한 도구로, '야권연대'를 위한 지렛대로 삼거나 거기에 가두지 않고 노동자계급이 권력이 장악하기 위한 과정과 경로로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그럴 능력이 있냐고? 이제까지 왜 하지 못했냐고? 이제부터라도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제까지 하지 못한 것이 앞으로도 그것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아니 이제껏 제대로 시도해 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 시도도 하지 않고 능력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시도한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나올 게 없다. 오히려 진보대통합, 민주대연합이야말로 성공했을 경우가 노동자계급에게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재앙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지금 세계적으로 계급투쟁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 위기가 노동자계급 투쟁을 저절로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의식적인 노력과

진보대통합이든 민주대연합이든 그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를 전면화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혁명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정치활동, 조직활동을 끈질기게 펼쳐나가는 것이다

실천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태세와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힘이 미약하거나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태의 일면일 뿐이다.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개량주의 정치가 활개를 치게 놔둔다면, 개량주의 지도부를 계속해서 허용한다면 노동자계급의 힘을 키울 수 없으며 정치적 성숙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진보대통합, 민주대연합을 둘러싼 한 바탕 잔치는 끝났다. 아니 끝장내야 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요구를 들고 투쟁에 나설 태세와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혁명**

비정규직 없는 세상,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임천용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없애버리는 체제임을 증명하고 있다. 만성적인 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그것이다. 정규직 노동도 실업의 공포 속에서 초과착취로 내몰리고 있다.

사라진 일자리

9월 26-27일에 열린 G20 노동장관회의에 맞춰 발표된 ILO와 OECD의 공동 연구조사에 따르면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G20 국가군에서 2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15년까지 일자리 사라지기는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물론 이들 국제 자본가 단체들의 연구에는 사라진 일자리와 함께 노동자들이 함께 사라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G20 노동장관 회의의 주요 의제인 고용의 문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고용확대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한 요지다.

고용이 아니라 자본가국가 파산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프랑스에 모인 G20 노동장관들

이러한 세계 경제정세 속에서 세계의 자본가들이 자의건 타의건 고용을 늘릴 수 없는 조건은 곧바로 일국적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본가계급 간의 국제적 경쟁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일국적인 노동자 투쟁마저도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하기에 이르고 있다. 일국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양보한 자본가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몰락을 자초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가들에게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 만약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이 없다면 자본가들의 의도대로 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비정규직

2011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보면,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비정규직은 약 862만 명(50.5%)으로 나타난다. 이는 무기계약직이나 분리직군제 같은 사실상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분류하였음에도 그렇다. 그리고 올해 1-3월 노동자 평균임금 조사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수준의 57.3%인 135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우 이미 통계조작청으로 소문난 지 오래고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은폐하기 위한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계청 수치는 전적으로 불안전하다. 통계청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올리고, 정규직과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작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통계조작으로 완화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덮을 수 없다.

계급투쟁인가 계급협조인가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은 어떠한 법 제도도 자본가들의 이윤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것이라면 결단코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현대차 자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십조를 쌓아놓

아이들만도 못한 – 대대손손 자본의 노예가 되겠다는 현대차 지부의 채용세습 요구안 관철

고 있으면서도 정규직화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22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자본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에 공장점거파업으로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속, 수배, 해고를 당했다.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과 자본의 첨예한 계급투쟁의 사안이다. 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도 총노동과 총자본의 전면적인 계급투쟁이고, 전체 노동자들의 계급적 힘을 동원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관료적 노동조합 지도부를 포함한 진보정당들의 공장점거파업 해제 중재는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라는 계급적 요구를 무로 돌리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에 돌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투쟁요구를 폐기하고 타협적이고 계급협조적인 요구로 미끄러져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가들로부터 초과착취와 억압에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관료적 지도부로부터 끊임없는 압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주요한 세력이 될 수 있다.

반면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채용세습과 같은 반노동자적 합의는 자본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행위다. 이러한 세력들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노예로 대대손손 만족하겠다는 자본의 천년왕국에 대한 비굴한 항복 선언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이 공장과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다. 노동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러한 반동적 합의는 파기되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함께 투쟁할 때에만 노동자로서 자존을 찾을 수 있다. 비정규직 철폐는 오직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대중적인 구호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 요구도 임노동제의 철폐라는 투쟁목표 속에서 배치되어야 한다. 쇠퇴해가는 반동적인 자본주의에 맞선, 특히 외주화, 용역, 하청 등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파견제 확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는 노동유연화 공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본가 계급의 공세에 맞선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철폐투쟁!" 이 계급적 단결을 촉진하고 임금노동 철폐를 위한 계급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구 투쟁들이 조직되어야 한다.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지난해 11-12월 25일 동안 진행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파업

동일노동 동일임금! 온전한 정규직화!

노동자의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변한다는 것은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다. 주요 제조업 대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을 비롯한 온갖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긴 시간을 일하고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 자본주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계급으로 단결할 수 있는 선명한 요구다.

그럼에도 일부 개량주의자들이나 조합주의자들은 자본가들의 선동에 한 배를 타고 있다.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그들의 처지를 조금은 개선하자거나 이를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하자고 말한다.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에도 이미 '비정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자 대중의 정서와 의지와는 무관하게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비정규직이 '자본주의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고용 안정의 완충판이 되어야 한다는 98년 현대차노조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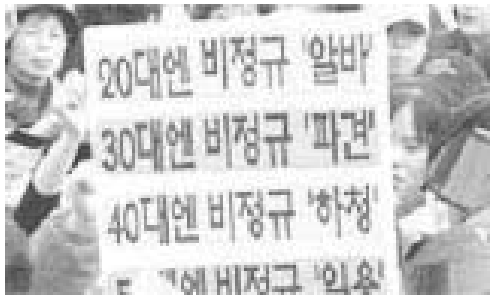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언제부턴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요구로 변질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의 평가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구체적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노동자 내부를 직종과 직무에 따라 차별을 둠으로써 노동자의 단결을 해치는 해악적인 주장이다.

모든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여야 한다. 그 어떤 종류의 비정규직 고용도 금지되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한다고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열악한 조건, 고용불

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구조조정으로 가장 먼저 일자리에서 쫓겨나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 정규직과 동일한 단체협약과 처우를 보장받는 것이다.

아웃소싱 반대! 외주화 반대!

기간제사용을 금지하고 기간제 노동자들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기간제 비정규직 고용의 심각성이 제기되자 사회적 비난과 규제 요구를 면탈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외주화 · 용역화 ·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방식은 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2,3중의 착취에 처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자본주의적 착취에 더해서 봉건적 수탈과 노예적 혹사노동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형태에서 원청 자본가는 장막 뒤에 숨어서 노동자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하지



만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원청 자본가다. 따라서 외주, 용역, 아웃소싱 등의 사업장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단결된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기간제법 철폐! 파견법 철폐!

2006년 말 국회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악법에 의해 현재 계약직 노동자들은 2년 주기로 집단해고 되거나 외주화,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계약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들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과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기간제법의 폐기되어야 하고 동시에 기간제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파견법 자체가 비정규직 고통을 양산하는 '시대의 악법'이며, 몇 가지를 손질한다고 개선될만한 법안이 아니다. 따라서 파견법의 완전 철폐만이 비정규직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화물지입차주, 레미콘기사, 덤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으로 불리는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불리고 있다. 자본가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통제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사회보험 적용 면탈을 받고 있으며, 자본가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위험은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라 불리는 노동자들도 똑같은 노동자다. 정부와 국회에서 멀쩡한 노동자들을 '유사근로자'로 이름 붙이며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은 단순히 법제도개선 수준의 문제로 머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으로 자신을 자각하고 집단적인 투쟁으로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투쟁을 계급적 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불법파견 정규직화! 하도급 근절!

건설산업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공공부문에 널리 퍼져있는 민간위탁, 제조업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및 사내하청 등은 모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른 이름들일 뿐이며, 모두 원청사용자들이 임금 및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자신이 사용자임을 은폐하기 위해 대다수가 거대자본인 원청사용자들이 무리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보니, 이러한 고용형태 거의 모두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내지 불법파견으로 확인되는 등 현행 법체계 하에서 수많은 불법을 동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해서 대법원조차 불법파견임을 인정하며 정규직화하라고 판결 내렸고, 또한 KTX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다시 비정규직 투쟁의 불길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모든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는 요구로 발전되었다.

이주노동자 단속 · 추방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현재 2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오늘도 3D산업의 열악한 일터에서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고 있다. 장시간노동과 위험한 노동환경, 부당해고, 최저임금, 임

금체불, 성폭력 … 이러한 차별과 폭력은 기본이고, 여기에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여 범죄자로 몰았다. 폭력적인 단속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마저 빼앗고 있다.

정부가 강행한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정책은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살인적 폭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2007년 2월11일 새벽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등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 · 추방의 실상은 실로 참혹하고 추악하기까지 하다.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건설되었으나, 법무부는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을 불법, 폭력, 표적 연행하여 이주노조 탄압을 시작하였고,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빌미로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고용허가제와 같은 기만적인 정책을 폐지시키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 추방은 중단시키기 위해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출발점은 노동허가제(노동비자) 도입을 통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에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은 정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똑같아야 하며, 임금과 단체협약의 동일적용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 투쟁들은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속에서 쟁취될 수 있다.

노동법 ·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노동자들을 투쟁대열로!

노동부가 조사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은 추이를 보면 2007년에 2만개 업체 점검해서 4072개소 적발, 2008년 2만5천개 업체 점검해서 9965개소 적발, 2009년에는 총 2만5555개 업체를 점검해서 14,896개소를 적발해 위반사업장이 3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2만개소를 점검해서 8천개소를 적발했다. 이렇게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55만 명이다.

미조직 서비스 노동자들로 주로 구성된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게 노동하는 층위이다. 만연한 실업 속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의 다수가 이 층위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에 이런 층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 사실상의 실업 상태와도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일반노조로의 조직화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을 노동자계급운동의 대열로 안내해서 투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혁명**

곽노현 사태와 부르주아 도덕

김병효

검찰에 출두한 곽노현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을 건넨 데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들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지배계급은 부르주아 도덕의 잣대를 들이밀며 노동자 계급을 포함한 진보 진영 전반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는 그들의 계급적 기반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그런데 소위 진보라 자처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운동세력들조차 부르주아 도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벗인 양 하는 이들이 정작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무관한 부르주아 도덕으로 무장한 채 심판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심판자적 태도는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이해라고 하는 목표를 내팽개치고 그 자리에 부르주아 도덕을 채워 넣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이라고 하는 과제를 먼 미래로 미뤄두고 오

직 자본주의적 개혁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게 된다. 이러한 행태는 일면 반동 세력의 행태보다 오히려 해악적이다. 반동 세력의 노골적인 책동이 계급 사이의 적대를 명확히 하고,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의 과정으로서 계급투쟁으로 안내하는 반면, 이들 노동자의 친구들은 노동자들에게 개혁주의적 환상을 유포하면서 노동자의 혁명적 에너지를 갉아먹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에서의 계급투쟁의 계속적인 패배라고 하는 조건과, 이와 연동된 것이긴 하지만 목적과 수단의 변증법이라는 맑스주의적 태도로부터의 일탈이라는 사상적 측면에서의 혼란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다양한 소부르주아 개혁주의로의 편향이 존재하는 것이다.

곽노현 사건에 대한 입장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이 전해졌다.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투표를 무산시킨 소위 진보 세력은 정치검찰의 술수라는 것을 직감한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곽노현은 스스로 돈을 건넨 것이 사실이며 금액도 검찰이 밝힌 것보다 많은 2억이라고 밝힌다. 다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어쨌든 곽노현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이와 관련한 태도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많으며, 사퇴해야 한다. 둘째,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므로 두고 보면 된다. 셋째, 2억을 건넨 것은 선의에 따른 행동으로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배계급의 전략과 소부르주아의 동요 – 진보의 핵심적인 가치는 진정성과 양심에 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많으며,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지배계급의 기본적인 판단이다.

조선일보는 곽노현이 2억을 건넸다고 밝힌

검은 돈으로 후보직 매수 – 홍준표

후 8월 28일자 사설에서 "합법성만 강조하고 인정(人情)을 상실하면 몰인정한 사회가 된다"고 하더니, "정작 자신이 법을 어긴 불의(不義)가 드러나자 '정의'란 칼 대신 '인정(人情)'이란 잣대를 들이대"라고 하며, 곽노현이 돈을 건넨 것이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암시했다. 강력하게 비도덕, 불법 공세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8월 30일 KBS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검은 돈으로 후보직을 매수한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것을 선의로 주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교육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힌다. 9월 1일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은 곽노현을 '몰염치와 부패 그리고 위선의 대표주자'라고 말한다. 조선일보가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 것에 비해 한나라당은 좀 더 도덕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도덕 공세 대부분은 대중들이 바로 한나라당과 관련짓는 것이다. 부정부패, 차떼기 정당 등으로 표현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한나라당이다. 특히 국회 인사 청문회 때마다 드러나는 위장전입, 탈세,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등 후보자들의 각종 불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는 이제 마치 MB 정부에 들어서기 위해 꼭 필요한 자격요건처럼 여겨진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도덕 공세를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나라당의 도덕 공세는 단순히 진보 진영을 싸잡아 비판하는 정치 공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소위 진보 진영에 존재하는 도덕주의적 태도와 비교해보면 쉽게 드러난다.

당장 소위 진보 세력들 사이에서도 한나라당과 동일한 입장이 존재한다. 특히 곽노현이 직접 2억을 건넸다고 밝히면서 이들은 도덕과 상식을 동원해 곽노현의 행위에 대한 실망의 표현과 함께 적극적으로 도덕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2억이라는 돈을 순수한 선의로 전달했다고 보기에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육감으로서 교육에 미치는 영향 및 자신이 추진해왔던 반부패 정책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진보의 핵심적인 가치는 진정성과 양심에 있다. 위선과 몰염치에 가득 찬 진보는 그 자체로써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느 진보 인사의 발언임직 한 이 말은 바로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에서 언급한 말이다. 제 집안 단속도 힘들어 보이는 한나라당이 진

보 진영에 대해서까지 오지랖 넓게 한 마디 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도덕과 상식은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를 도덕과 상식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를 일반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계급 적대와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은폐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지배계급의 이해를 사뭇 점잖은 태도로 조언하듯이 내뱉으면서 소위 진보진영 역시 부르주아 도덕을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도덕주의자들, 즉 전형적인 소부르주아 지식인 말이다.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은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계급 이해를 표현할 수 없으며 변동하는 정세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급투쟁의 장에서는 철저한 무능력과 혼란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무게추가 기울면 거기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도덕주의적 설교를 통해 예언자적 태도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정치적인 무력감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노동자의 귀에 부르주아 도덕을 지껄이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들은 언제든 노동자 계급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개혁주의 세력의 한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므로 두고 보면 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곽노현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곽노현으로 표현되는 진보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판적지지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그리고 많은 소위 진보 인사들이 취하는 태도다. 이들은 곽노현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판단 대신 검찰 수사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곽노현 공대위 기자회견

민주당은 검찰 수사 발표 직후에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가, 9월 2일 입장을 바꿔 피의사실 공개 및 정치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사실상 사퇴 입장을 뒤집었다. 민주노동당은 29일

대변인 논평에서 '대가성이 사실이라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그러다가 이후 논평에서는 슬쩍 사퇴 입장을 뺀 채 검찰의 정치공세와 피의사실 유포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곽노현을 옹호하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곽노현의 2억 기자회견 전인 27일 논평을 통해 정치수사라며 검찰의 조사에 문제제기 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후인 29일에는 표적수사이긴 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진보교육감의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표현도 함께 담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민주당이 이후 판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까지 감수하고서도 입장을 뒤집고 곽노현 옹호 입장을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2012년 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한나라당과의 대결을 앞두고 소위 진보 진영의 표를 결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속적인 민주당의 좌클릭 속에 민주주의, 인권, 보편적 복지, 그리고 구체적 정책에 있어서는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등 곽노현이 주장하는 진보적 가치를 못 받아들일 것도 없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곽노현으로 표현되는 진보의 가치라는 것이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는 무관한 부르주아 개혁 세력의 가치라는 것이다.

당장 곽노현의 가치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통한 압박 속에서 노동자들의 이해를 구현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제위에 따른 긴축과 노동자에 대한 고통 전가,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위기의 심화라는 조건 하에서 부르주아 개혁 세력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곽노현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크게 방향을 바꾸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도덕의 기조에서 전혀 벗어난 적조차 없는 것이다.

물론 부르주아 개혁주의자라 하더라도 바로 그 개혁적 성격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안에 따라 노동자들의 이해와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긴 한다. 노동자들이 때때로 개량주의 세력들의 정책에 지지를 보내기도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계급적 이해와 다른 상황에서의 지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안에 따른 일시적인 연합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른 차원의 문제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곽노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죄로 판결나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무죄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야당들을 포함하여 이들이 곽노현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피해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검찰의 행태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곽노현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입장을 내기 힘든 상황에서의 절충적 입

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부르주아 개혁주의 세력은 근본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부르주아 도덕, 그리고 그 형식적, 제도적 표현인 법을 넘어서지는 않고서는 결코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없다.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이해를 진보라는 틀로 형해화시키고 노동자들에게 개혁주의적 환상을 유포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 계급의 잠재력을 소진시키는 짓이다.

최근 전 세계에 걸쳐 혁명의 기운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주의 세력은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자본주의의 틀 안에 가두고 어떻게든 혁명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데 주력한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혁명성이 분출할 때는 개혁주의 세력이 설 자리조차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존 질서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결국 개혁주의 세력의 이러한 태도는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 사상으로서의 맑스주의는 물론이고 현실에서의 노동자들의 이해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탈정치의 정치 – 순수 그리고 무지

2억을 건넨 것은 선의에 따른 행동으로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바로 곽노현 자신의 주장이자, 지지자들의 주관적 의지가 투영된 결론이다. 먼저 곽노현 자신의 주장부터 살펴보자. 곽노현은 기자회견에서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 곤궁과 심리적 위험"을 두고 볼 수 없어 긴급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2억을 건넨 행위가 후보 단일화 대가가 아닌 순수한 의도였다고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순수'한 의도였으므로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도 당연히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많은 지지자들의 택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이 부르주아 도덕을 강요하는 태도라면 곽노현 및 지지자들의 태도는 정치적 판단과 무관한 '순수'의 영역, 즉 절대 도덕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곽노현지지 촛불

법의 관점에서 비난하고 있는바 문제의 화해와 증여는 범죄가 아니라 선한 본성을 드러내는 계기로서 사건(event)이라고 보아야 한다.

엄격하게 순수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인간성의 파괴이고 테러라고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순수성의 잣대로 삶을 재단한다면 인간은 완전히 초라한 파충류가 될 것이다.

곽노현, 강경선 등과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건국대 이재승 교수는 사건 당사자들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면 대가성 없는 순수한 증여가 맞다고 주장한 글의 일부다. 이 교수는 기사에서 '포틀래치' 비유를 들어가며 순수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곽노현 및 지지자들은 정치적 입장을 제시해야 할 순간에 무조건 승리를 보장하는 '순수'라는 절대 카드를 내밀었다. 2억에 대한 의혹 제기가 모든 인간 행동을 유전자 수준에서 규명하라고 하는 것처럼 무한 소급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말 그대로 상식적인 수순에서 행위의 목적과 의도를 판단해 보는 것일 뿐이다. 이 교수가 예를 든 '순수'한 증여 행위인 포틀래치조차 자신이 인정하다시피 자신의 관대함과 대범함을 드러내어 사회적 위신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목적과 무관한 순수한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순수'한 동기에 기반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행해지는 순간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 된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 살인 행위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되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오히려 살인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도덕을 논하려면 최소한 그 사회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수는 선한 본능 운운하면서 탈역사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과 무관하게 '순수'한 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태도는 현실에서의 계급투쟁은 물론이고, 목적과 수단의 변증법적 상호 관련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순수'를 주장하는 태도는 마치 MB 정권의 장관 인사 청문회의 한 장면을 보는 듯도 하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 비리 등에 대해 장관 후보자들의 한결같은 답변, 당시 사회 통념이었고, 그럴 의도는 없었고 등등. 이 말과 순수의 차이는 무엇인가?

결론을 대신하여

맑스주의에 있어서 수단은 목적과 관련해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 여기서 수단과 목적은 고정불변의 무엇은 아니다. 때로는 수단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목적이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목적의 정당성은 어떻게 보장하는가? 여기서 목표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폐지하고 인간의 자연에 대한 힘의 증대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맑스주의의 관점, 즉 프롤레타리아의 역사적 이해라는 측면에

서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계급적 이해를 반영하는 것은 곽노현으로 표현되는 개인 혹은 배후의 정치세력이 아니라 계급투쟁에서의 한 걸음 전진이다. 결국 노동자 계급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곽노현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전면화시키고 이를 현실에서 관철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곽노현 교육감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그 자체로 계급적 이해를 전면화시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물론 곽노현 교육감을 둘러싼 쟁점이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으로서의 투쟁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에 곽노현 사건의 추이에 따라 노동자 계급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달라진다. 그러나 현실적 입장에 대한 강박으로 소위 진보 세력이 부르주아 도덕을 빌어서라도 뭔가 입장을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 계급의 전진을 가로막게 된다.

곽노현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들의 시각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약점들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계급적 이해를 드러내는 출발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혁명**

[유성지회 동지들 인터뷰]

“조합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전체 계급적 관점에서 투쟁하지 않으면 이명박의 노조 말살 정책에 대응할 수 없다.”

엄기준, 엄선주 / 구재보

91일간의 투쟁을 일단락하고 현장으로 복귀한 유성지회 엄기준 동지(아산공장 정비과 대의원)와 엄선주 동지(아산지회 검사과 대의원)를 만났다. 엄기준 동지는 지난 2003년 세원테크지회 이현중,이해남 열사 투쟁 당시 구속되어 4년의 옥고를 치른 동지이다. 엄선주 동지는 입사 5년차 막내이면서 올해 대의원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동지이다.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고 공장 앞 시내에 있는 작은 시골마을 다방에서 진행했다. 유성자본의 현장탄압에 맞선 현장투쟁, 어용노조와의 마찰, 선복귀 조합원들에 대한 재조직화 활동 등 하루하루 고된 상황에서도 웃으며, 때로는 분노하고, 슬퍼하는 모습 속에서 유성지회의 희망을 느꼈다.

아직 유성지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한 번 예전처럼 노동자들이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당연히 유성동지들만으로는 할 수 없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계급적 관점에서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때만이 가능하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인터뷰 진행 : 구재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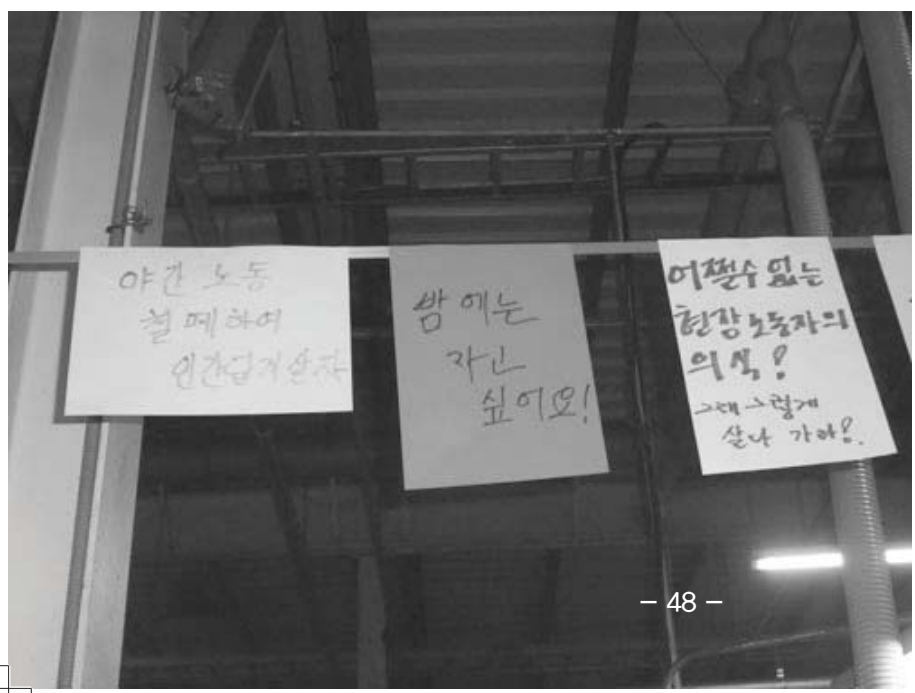
Q. 91일간의 투쟁이 일단락되고 현장에 복귀했는데 지난 투쟁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선주 :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 다른 투쟁사업장에 연대가서 보면 우리는 호강하면서 투쟁한 것 같다. 조합원들의 경우 집행부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따라올 사람들이 대부분인데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집행부가 조합원들이 투쟁하려는 것을 억누르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또 주간연속2교대 쟁취든 일괄복귀 쟁취든 간에 하자고 했으면 하나로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다.

기준 : 유성이 외부적으로는 조직력과 투쟁력이 강력한 조직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었다. 5월18일 투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측에서는 휴일에 관리자의 라인 투입을 노조에 요청했었는데 집행부가 그것을 허용해주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이다보니 그동안 조합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안이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막상 직장폐쇄를 당하고 보니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힘들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Q. 야간노동 철폐가 조합원에게 직접적이고 절실한 요구가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기준 : 주간연속2교대 요구를 처음 접했을 때 만일 유성이 이것을 쟁취하게 되면 전국 노동자들에게 가히 혁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야간노동을 하고 근속년수가 높은 조합원들은 임금 손실 문제때문인지 달가워하지 않았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하면서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약간의 임금손실을 각오하고서라도 야간노동은 철폐되어야 한다. 당장 눈앞의 임금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Q. 6월 14일 현장복귀 선언(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그것이 유성

투쟁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나?

자본주의적 자유, 평등, 정의-직장폐쇄의 불법성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 대신에 조정꾼 노릇을 하다!

선주 : 5월24일 공권력 투입 이후 조합원들이 개별적인 현장복귀를 하던 과정에서 남아있는 조합원들의 조직력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기준 : 현장복귀라는 것은 우리가 엎드리고 들어간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다보니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합원들도 있었지만 또 일부는 이미 진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동지들도 있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이야기처럼 그동안 아무것도 아닌 듯한 사측의 탄압들에 대해서 지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과정들이 계속되면서 조직력이 많이 축소되어 있었고, 유성지회가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조직으로 비쳐졌지만 내부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다.

Q. 재판부의 조정으로 투쟁이 일단락되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기준 :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계속해서 조정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비대위에 조정에 목매지 말 것을 강하게 얘기했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조정 결과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했기 때문에 비대위가 많이 몰렸던 것 같다.

선주 : 당시 비대위와 변호사가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기대치를 올려줬다. 실제로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이거 하나 믿고 버텼던 사람들이 있었다. 조합원들에게 법률적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차라리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투쟁을 조직했어야 했다.

Q. 조정내용 중 각서를 썼는데?

선주 : 각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이게 뭐냐, 사측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노조가 뭐하는 거냐'라고 불만을 표출했

다. 정말 이런 것 받으려고 싸웠던 것이 아닌데 너무 허탈했고, 노동조합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도 생각했다.

Q. 투쟁 과정에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준 :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투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집회에서 위원장 연설 한 번 하고 가는 게 끝이었다. 조합원들은 싸우지 않을 거면서 뭐하러 오냐 라는 불만도 터져 나왔었다. 6월 22일 투쟁 다음날 금속 충남지부가 하기로 했었던 공장 앞에서의 총회투쟁을 연기했었는데 조합원들이 지부 사무실에 아가서 강력하게 항의도 했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투쟁조직인데 유성투쟁을 돌아보면 싸우려고 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생각을 했다. 싸우지 않는 조직은 뇌사 상태의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또 진보정당 역시도 투쟁하는 동지들을 그저 정치권(의회)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Q. 복귀 후 먼저 복귀한 조합원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선주 : 어용노조가 만들어졌는데 그들하고는 단절하고 지내지만 징계를 안 하겠다는 조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용노조에 가입한 사람하고는 친분을 유지하려고 한다.

기준 : 정비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복귀했지만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들을 끌어안고 재조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재조직 활동이 조직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다.

Q. 복귀 후 현장 탄압의 형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탄압에 맞서 어떻게 투쟁하는가?

기준 : 전환배치와 이에 불응하면 경고장을 남발하고 귀가조치 등을 자행하고 있다. 또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있

다. 정비과 조합원들은 사측에게 우리가 뭉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모이는 시간들을 자주 갖고, 토론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하자고 결의한다.

션주 : 검사과의 경우 복귀를 하고 보니 사측이 라인을 통합시켰다. 먼저 복귀한 동지들이 이에 맞서 싸웠다. 경고장을 받고 귀가조치를 당하고, 심지어는 용역깡패들에 의해 겨나기도 했지만 결국 예전대로 되돌려놓았다. 또 과장이 노조사무실 가는 것, 화장실 가는 것까지 자기에게 허락받고 가라고도 해서 하루 종일 과장 따라 다니면서 일일이 허락을 받는 투쟁을 했다. 결국에는 과장이 중요한 것들만 보고하라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검사과 동지들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함께 모여서 토론해서 결정한다. 한명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Q. 이러한 현장탄압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투쟁하고 있는가

기준 : 현재 비대위는 해소했다. 지회장과 쟁의부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집행부가 비대위 체계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조직력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조직력을 확대하고 사측의 탄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차기 지도부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션주 : 조합원들보다 집행부의 의식이 떨어지는 것 같다. 조합원들은 싸우려고 하는데 집행부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면서 억누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Q. 이번 투쟁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션주 : 노조활동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제비뽑기로 대의원을 맡았는데 맡자마자 직장폐쇄가 터진 것이다. 뭐가 옳고 그른 건지 판단할 수도 없었다. 그렇지만 대의원이었기 때문에 선배 언니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기 시작했다. 진작에 많이 알았으면 하는 후회가 든다. 이번 투쟁을 통해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되게 많이 잘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또 뭐 하나라도 쟁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열심히 배우고 공부할 것이다.

Q.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요구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만을 가지고 투쟁의 승패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조합주의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의식이 얼마나 성장했고 조직력이 얼마나 탄탄해졌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또 조합주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계급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준 : 공감한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부분을 조합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그동안 유성도 그래왔다. 임금을 얼마나 더 올려낼까, 체육복을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할까 등등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 왔었다. 이런 것들이 사소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데 그러다보니 조합원들 역시도 여기에 서서히 물들었던 것 같다.

Q. 마지막으로 지역 및 전국의 동지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혹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기준 : 유성투쟁이 터지자마자 우후죽순으로 전국에서 연대해주었던 노동자, 학생, 선생님, 공무원 동지들에게 고맙고 그렇게 연대했던 동지들에게 승리하지 못한 결과를 안겨주어서 안타깝고 미안하다. 그렇지만 투쟁하는 장소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투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올바른 연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합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전체적이고 계급적 관점에서 투쟁하지 않으면 이명박의 노조 말살 정책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우리 투쟁 끝나지 않았으니 지속적으로 연대해주기 바란다.

선주 : 고맙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할 뿐이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쟁하는 다른 사업장에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앞으로도 우리 투쟁을 계속할 것이니 많은 관심 바라고 우리도 더 힘 있게 연대하겠다. **역명**

오늘의 후퇴는 다시 계급적 관점으로 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다려라. 자본가들이여!

사노위 4차 총회 - 혁명정치를 폐기하고 조직을 유지하다

이성효

사노위 3차 총회 모습

지난 6월 사노위의 3차 총회는 공동실천위원회로서의 사노위가 출범시 노동자계급에게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을 이루어내 추진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대로 1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노위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운동의 전면화/대중화 등을 비롯,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으나 반면 내부적으로 도저히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이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추진위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했다. 그 결과가 1년간 강령위를 비롯해 전조직적으로 논의되었던 강령초안이 단일화에 실패한 것이었고 3차 총회는 강령통일에 실패했으므로 출범시의 계급에 대한 약속대로 해산을 선언했어야 마땅했다.

예정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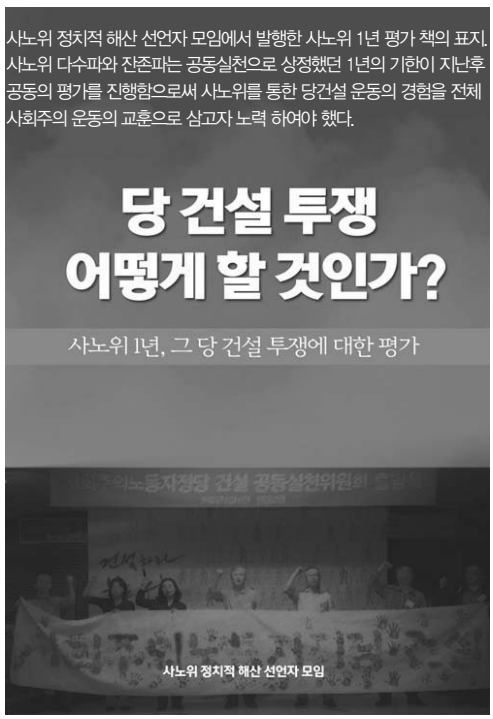
그러나 소수파(이후 사노위 해산 선언자 모임으로 활동)가 제기한 강령통일 실패에 따른 해산안은 부결되었고 다수파는 소수파의 퇴장 후 사노위의 출범/합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결정 –– 강령위를 새로 구성해 강령 단일안을 마련해 4차 총회에서 유보없이 강령초안을 채택한다는 –– 을 한다. 이는 1년간의 사노위 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가진 회원들의 토론과 논쟁, 실천활동을 통해 강령/전술/조직상에 화해할 수 없는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4차 총회에서 다수파의 입맛대로 강령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었고, 이 결정으로부터 이미 내적인 야합으로 조직유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잔존 사노위의 행보는 예정된 것이었다.

연방주의와 관료주의

잔존 사노위는 9월 3–4일 4차 총회를 열었고 이 총회를 통해 '3차 총회에서 유보된 강령 초안이 채택됨으로써 공동실천위원회에서 단일조직으로 위상을 전환하여 추진위 출범계획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3차 총회까지 사노위의 당건설 투쟁의 경로였던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통한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이 마치 강령건설이 미진해 3개월 연장되었다가 마침내 초안을 채택함으로써 그 완결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식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은 물론 거짓이다. 사노위의 1년간의 과정은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작년 사노위 출범 직후 벌어진 가입원서 작성 거부 사태와 중앙위의 사보타지는 당건설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연방주의에 맞선 투쟁이 조직노선을 확립하고 당건설 태세를 확고히 하는데 필수적임을 보여줬다. 출범총회 결정사항인 가입원서 작성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사보타지한 구 사노준 회원들에 대해 규율을 세우는 것은 당연했으나 1기 중앙위는



"공동실천위원회이기 때문에 징계는 과도하다"며 "결정은 유효하나 따르는 것은 회원 자유"라고 결정하며 자신의 역할을 회피하고 조직규율 파괴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사노위의 당건설 총력투쟁 체제를 위해 의견그룹은 2차 총회에서 중앙위를 정치적 중앙으로 구성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연방주의에 맞서 조직활동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중앙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했으나 기존 무규율과 연방주의 경향이 표결에서 다수를 획득한다.

무규율과 연방주의 경향의 다수파는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조직기구에서 산술적 다수를 점해 실질적으로 사노위를 통제하게 된다. 의견그룹은 계속해 연방주의에 맞

비평이라는 형식을 통해 조직내 건강한 비판적 견해를 표현했을때, 상호 비판과 토론을 통해 차이를 통일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파의 지위를 활용하여 관료적 제재만을 획책하는 것은 그 조직이 얼마나 폐쇄적이며, 종파적인 다수로 구성되었는지를 드러낸다.

서 민주집중제를 확립하기 위해 투쟁했고 이를 가로막은 것은 다수파의 관료주의였다. 다수파는 서울지역위의 〈사회주의자 통신〉에 한 회원이 기고한 소책자 비평글이 조직의 사업을 부정하고 파괴했다고 규정하며 공개사과와 글의 삭제를 관철시켰다. 이러한 다수파의 관료주의는 다수 회원들의 무규율적이고 연방주의적인 활동과 양날개를 이룸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노위가 당건설을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미 혁명정당 건설과 양립할 수 없는 경향이 사노위 다수파에 의해 뿌리내렸던 것이다.

조합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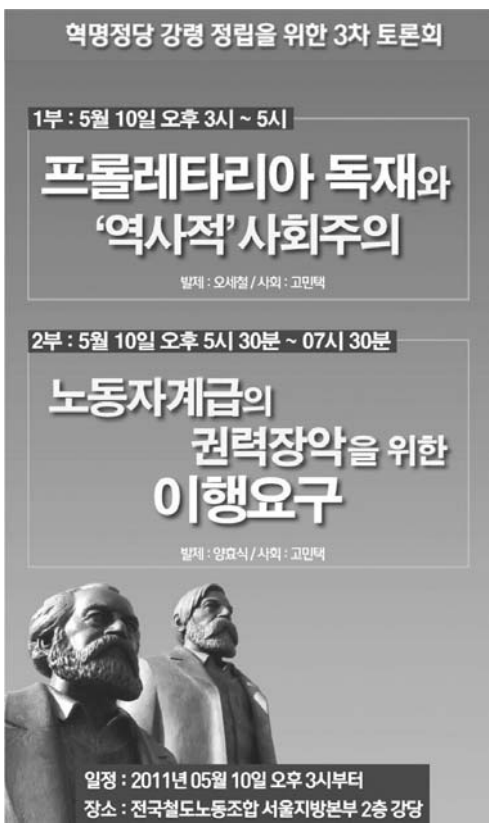
다수파의 조직노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사노위 출범시 결정된 11가지 정치원칙에 근거한 정치방침을 매 국면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회원활동과 조직사업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출범시부터 구 사노준 회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정치원칙에 대한 사보타지는 급기야 조직의 정치적 활동정지에까지 이른다. 특히 '강령(이행요구 포함)에 입각한 노동자투쟁 조직화'라는 정치원칙에 대한 내용상의 논쟁이 아닌 무조건적인 거부는 강령토론회를 비롯해 강령위 내부에서까지 재논의해야 한다는 따위의 입장에 부딪쳤다. 정치원칙에 입각한 조직활동만이 써클주의를 극복하는 공동실천위원회의 사활적 과제임에도 이러한 정치원칙에 대한 부정 속에 사노위 활동은 조합주의로 점철되게 된다.

작년 타임오프 투쟁 시기 기아차는 전국전선의 핵심 사업장이었다. 사노위 소하리 공장의 회원들은 김성락 집행부와 같은 현장조직 소속이었고 사노위는 금속파업에 기아차가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선전선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기아차지부는 무쟁의 합의를 선언했고 사노위 중앙집행위원회는 긴급하게 사노위 화성/소하리 공장회원들을 소집했고 무쟁의 합의에 맞서 전직임원으로 활동

했던 소하리 공장 회원들에게 전임임원단 공동농성을 제안했으나 이는 거부된다. 같은 현장조직 소속인 김성락 집행부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노위의 11가지 정치원칙중 하나가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회주의 현장분회 건설'을 통한 정치활동 전개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는 분명히 교정되고 평가되어야 했지만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유성기업에서는 처음 공장을 점거하며 기조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사노위 충남대표가 야간노동 철폐, 주간연속 2교대는 불가능하며 민주노조 사수 정도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기각되었지만 두 차례나 제기되었다. 사노위 회원들이 유성기업 투쟁에 헌신적으로 결합한 것과 별도로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말하는 사노위가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전망을 제시하는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후진적 정서로 투쟁을 쪼그라들게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것은 사노위가 자본가 언론이 유성투쟁의 '배후' 운운하는 것과 무관하게 실제 조합주의와 맞서는 사회주의 정치투쟁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원칙과 전술방침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서 우리는 가장 열심히 연대하는 조직일지는 몰라도 정치적 지도를 수행할 수는 없는 조직이 되었다. 조합주의와 단절하기 위한 사노위의 투쟁은 정치원칙에 대한 부정 속에 회원들의 개별적인 활동으로 방치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미 출범 후부터의 활동으로 사노위는 연방주의와 무규율, 조합주의와 후진성, 다수파의 관료주의로 인해 당추진위로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모든 회원들이 정치적 통일보다 차이와 이견 속에 조직활동이 아닌 개별활동에 머물렀다. 당건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강령임을 상황은 반증했다. 사노위가 당건설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사노위내 소수파는 혁명강령건설 위한 강령정립모임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대중과 호흡하며 건설하는 혁명강령 건설을 위해 3차까지 독립적으로 공개 강령토론을 기획하고 대중에게 알리며 진행한다.

이 혁명적 강령의 채택이었다.

조직보존주의

1년간의 사노위의 정치활동은 실천 속에 정치를 검증하고 통일해 나가지 못한 채 차이와 혼란만을 드러냈고 이것이 강령위원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령위에서만의 논의가 중심이 아닌 대중적이고 전조직적인 토론과 이를 통한 강령건설을 위해 소수파는 3차 총회를 앞두기까지 혁명강령 토론회를 비롯해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자 노력했지만 다수파는 형식적인 한 차례의 강령토론회만 진행했고 전조직적인 강령토론은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 강령위의 논의는 서로 근본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강령(안)임을 확인하고 끝났다.

그러나 다수파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는 5월 15일 '3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차기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유보 없이 채택한다', '단일안 작성을 전제로 강령기초위원을 선출한다'고 결정했다. 이미 3개 강령초안을 제출한 강령기초위원 전체를 포함한 강령기초위가 단일안은 불가하다고 보고한 상황에서 말이다. 이것은 당건설로부터 정치투쟁 수행, 권력장악에 이르는 당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이 다르고 이 차이가 1년간의 사노위 활동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 상황 자체를 부정하고, 다수파가 밀어붙여 강령안을 채택하겠다는 것이었다.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을 강령(안)으로 확인한다'는 사노위 출범시 결정과 '1년간 단일화되지 않은 강령을 단일안을 전제로 구성한 밀실 강령위에서 작성하고 유보 없이 채택한다'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3차 총회에서 소수파의 '강령통일 실패에 따른 해산안'은 부결되었다. 다수파는 1년 활동의 총체적인 결과물로서의 강령통일 실패가 아닌 강령위의 책임론 따위를 늘어놓았다. 다수파는 하나의 총체적인 권력장악 프로그램으로서의 강령을 떼었다 붙였다 협상하는 '이견을 병기한 강령'으로 타협하자는 논리를 늘어놓았다. 다수파는 '자본가언론이 주요투

쟁에 사노위를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며 사노위 유지론을 제기했다. 이 모든 주장의 논리적 근원은 맹목적인 조직보존주의다. 사노위 출범시 무원칙한 동거를 방지하기 위해 1년이라는 기한을 설정한 것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혁명강령은 조직유지를 위해 3개월만에 밀실에서 만들어진다. '사노위를 통한 당건설'은 '사노위에 의한 당건설'이 되었다.

4차 총회의 정치적 의미

4차 총회를 통해 제출한 강령초안은 기존 제출된 3개의 안이 이미 단일안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모두 인정한 2개의 안(2인안은 4차 총회 결과에 불복해 탈퇴함)의 합의된 지점을 모은 것이며, 이행요구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이견을 병기해 제출되었다가 총회 현장에서 서로에 대해 최후통첩을 날리다가 밀실에서 몇 명이 이행요구 합의안을 급조해 채택되었다. 혁명강령은 강령건설을 위한 실천적인 투쟁으로 건설되는 것이지 이미 1년의 경험으로 정치적 통일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기반 위에서 조직유지를 위한 야합으로 제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혁명강령이 될 수 없다.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을 위한 노선인 강령은 과학적 인식에 기초한 총체적인 세계관으로 그것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계급에 복무한다. 혁명강령은 구체적 현실에서 계급의 무기로 활용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적당히 묶어놓은 것은 노동자계급 권력장악 투쟁에서의 날카로운 지침이 될 수 없다. 강령 간 총노선의 차이는 작년 사노위 정치신문에 '카다피 정권을 방어하라' 대 '카다피에 맞서자' 라는 서로 충돌하는 의견이 게재된 것처럼 노동자계급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게 된다. 여기서 굽힘없이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취하는 것만이 혁명강령이 될 수 있다. 혁명강령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혁명강령 건설에서의 협상과 양보는 혁명투쟁에서의 협상과 양보를 예고한다. 강령에 기초한 혁명정당 건설의 원칙은 폐기되었다. 결국 잔존 사노위의 4차 총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잔존 사노위는 노동자계급에게 약속한 사노위라는 당건설투쟁을 대중적이고 실천적으로 전개하여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을 이루어내고 검증받는 대신 계급에 대한 거짓과 은폐, 내적인 야합으로 변질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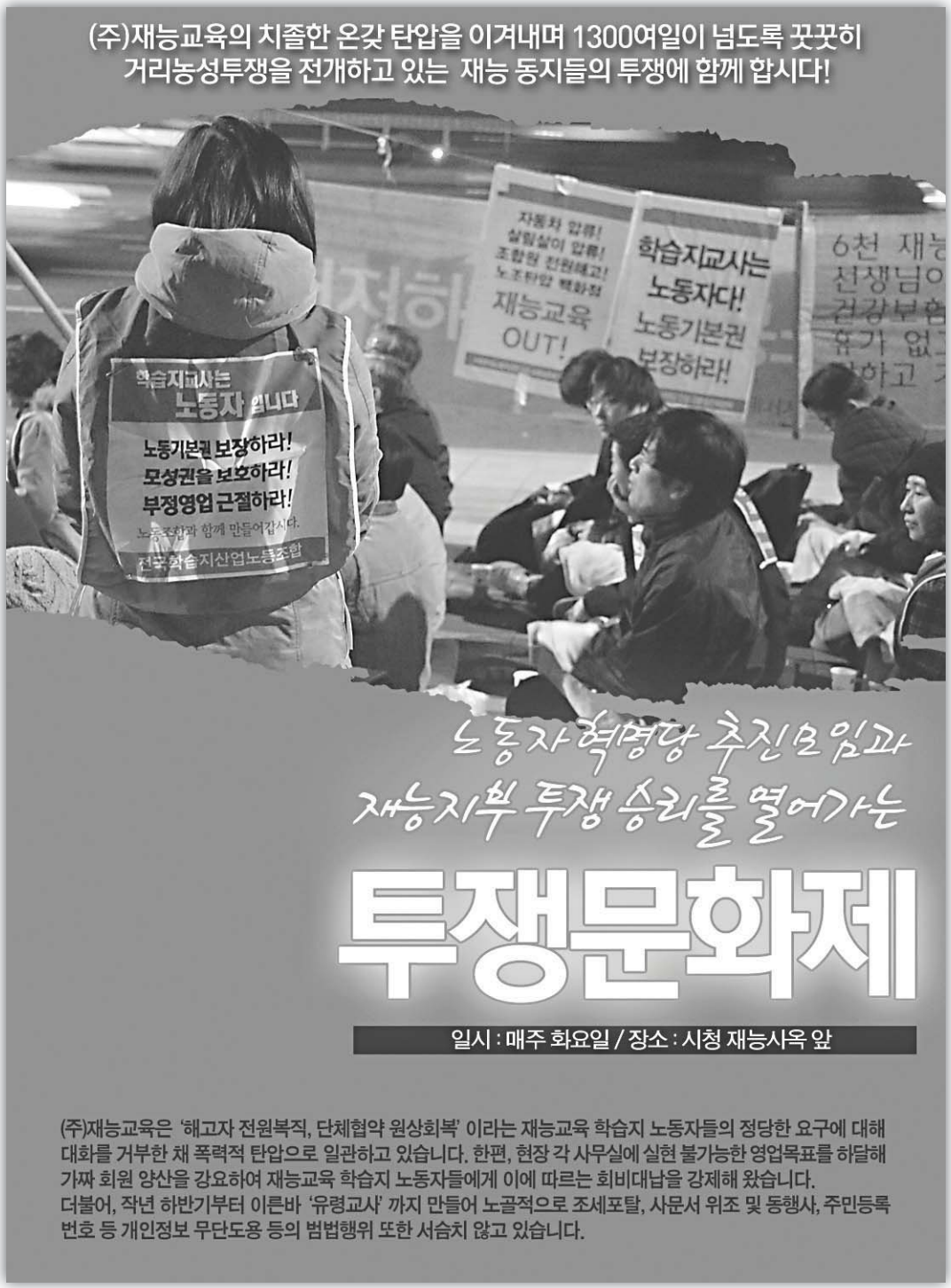
둘째, 잔존 사노위는 그들의 정치가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을 통한 혁명정당 건설이 아니라 무규율, 연방주의, 추수주의에 근거한 조합주의로 조직을 보존/유지하는 데 급급할 뿐임을 드러냈다.

셋째, 잔존 사노위는 노동자계급의 무기로서의 강령 건설을 개량주의에 뒷문을 열어놓은 중도주의까지 여러 경향들을 두루뭉실하게 섞어 적당히 타협해 만드는 것으로 희화화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훼손했다.

잔존 사노위와 같이 조합주의 정치와 단절하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강령에 입각하지 않는, 조직보존을 위해 야합하는 세력은 결국 파산하게 된다. 이로부터 다시금 혁명세력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갖는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확고히 하는 혁명강령의 기초 위에서 계급투쟁의 최선두에 서서 노동자계급과 함께 전진하는 혁명정당을 건설하자!"

혁명

혁명의 광고


(주)재능교육의 치졸한 온갖 탄압을 이겨내며 1300여일이 넘도록 꿋꿋히
거리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재능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 합시다!
학습지교사는 노동자 입니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모성권을 보호하라!
부정영업 근절하라!
노동조합과 함께 만들어갑시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재능교육 OUT!
노동자 혁명당 추진보 임과
재능지부 투쟁 승리를 열어가는
투쟁문화제
일시 : 매주 화요일 / 장소 : 시청 재능사옥 앞
(주)재능교육은 '해고자 전원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 이라는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대화를 거부한 채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 각 사무실에 실현 불가능한 영업목표를 하달해
가짜 회원 양산을 강요하여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에게 이에 따르는 회비대납을 강제해 왔습니다.
더불어, 작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유령교사' 까지 만들어 노골적으로 조세포탈,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 무단도용 등의 범법행위 또한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혁명≫, 작지만 명확한 원칙과 넓은 전망으로 출발하다

– 정세토론회 평가 –

“

지난 9월17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수도권 정세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정세토론회는 현 정세의 반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에서 특별한 주제를 찾지 않고 현 정세의 중요한 부분을 대부분 담아내고 분석한 월간정세지≪혁명≫의 내용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간 ≪혁명≫은 창간준비 1호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었는데 현재 3호 발행을 앞두고 있다. ≪혁명≫ 창간준비 2호가 나오고 나서야 피드백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정세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덜 된 때문이며, 그럼에도 2호를 시작으로 정기적이고 공개적으로 정세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은 우리의 정치입장과 정세판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이다.

”

이번 정세토론회는 크게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1. 국내정세– 진보대통합, 민주노동당 강령개정에 대하여
2. 자본주의 경제위기– 현 위기와 쇠퇴하는 자본주의
3. 국제정제– 리비아혁명에 대하여
4. 역사와 계급의식– 계급의식과 계급무의식에 대하여

어느 하나 가볍게 넘어갈 주제는 없었지만, 이미 ≪혁명≫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바 있으므로 내용에 대한 짧은 발제 이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접어들자 각 주제들에 대한 심화토론뿐 아니라 토론과정에서 나온 쟁점들에 대한 확대토론으로 이어지면서 오랜만에 정치토론답게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이날 못 다한 토론과 부족한 부분은 다음으로 넘기고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국내정세〉

첫 번째 주제로 상정된 국내정세는, 부르주아 선거 국면이라 불리는 권력 재편기를 앞두고 온갖 이합집산과 정치노선의 변화를 겪고 있는 의회주의(사민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판단과 대응 문제였다.

1) 진보대통합 관련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진보대통합은 총선/ 대선 선거대응을 위한 개편이며, 기껏해야 서구에서 실패한, 노동자 투쟁을 배신한 인민전선 재판이다."** 라는 규정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또한 실천적 대안으로 **"공산주의 전망에 기초한 혁명당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는 입장도 당연히 지지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진보대통합을 주도하는 개량주의, 사민주의 세력에게 넘어가 있는데, 다시 이들을 계급운동, 혁명운동의 진영으로 비틀어 빼내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전면적인 정치활동과 계급운동을 벌여나가지 못하기에 계급에 대한 개입은 전망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혁명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치조직답게 사민주의에 대한 반정립운동이나 선거 국면에서 대중회득을 위한 단기적인 정세개입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

으로 계급의식을 바꾸고 계급 운동을 혁명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망과 구체적 방안들을 계급투쟁 속에서 하나하나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이었고, 이것이 당분간 우리 운동의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인물 따라 진보대통합 · 독자적 입장이 없는 개량주의 정당은 자본가 정당과 노동자계급 혁명정당 사이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경제위기 속에서 개량주의자들은 체제의 버팀목임을 자본가들에게 증명해야 한다. 이것이 국참당, 민주당과의 민주대연합으로 빨려들어 가는 정치적 배경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진보나 좌파 개념은 사상 이념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되는 불명확한 개념이며"**,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계급적이지도 정치적이지도 않은 상대적, 반정립 개념임을 공유했다. 노동자계급에게는 진보나 좌파가 아닌 노동자계급 대 자본가계급이라는 계급적 관점과, 자본주의 정치를 구성하는 부르주아 정치(사민주의 포함) 대 노동자 직접정치를 실현 할 공산주의 정치, 반혁명적 사상조류 대 혁명적 사상이라는 명확히 적대적인 정치적 입장이 있을 뿐이다. 반혁명적 스탈린주의와 그 변종들, 노동자 직접정치를 가로막는 사민주의자들이 진보, 좌파라는 외피를 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본질적으로 노동자계급을 혁명과 모든 권력의 주체로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2) 민주노동당 강령개정 관련하여, 좌파 민족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삭제 강령 개정은 위의 진보대통합의 맥락과 같이 반MB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부르주아(자유주의) 정당들과 연합하기 위한 포석이자,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그동안 **"이들의 대리주의 정치는 노동자계급의 자발적 투쟁분출과 계급투쟁의 확산에 장애물이 되어왔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는 정치적으로 노동자계급을 대상화, 수동화 시켰으며"**, 사회주의 정치세력에게는 계급운동과 계급투쟁에 직접 개입하고 조직하는 것에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해 왔음을 공유했다.

≪혁명≫에서는 이러한 대리주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자립화를 위한 혁명

당 운동과 노동자평의회 운동을 제시했는데, 실제 노동조합운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운동과 조직형태가 현실에서 가능한지 여부와, 혁명당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운동에 대한 토론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새로운 운동에 대한 현실의 적합성 여부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운동 형태는 촛불투쟁, 희망버스 운동에서 보이듯이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그리고 쇠퇴의 국면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필연적으로,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운동이 출현할 조건과 주체의 계급의식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체제가 쇠락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에 조응하며 유지되어 온 낡은 운동형식들은 이제 혁명성, 계급성을 상실한 채 몰락해 가고 있다. 아직 새로운 운동이 낡은 운동을 대체할 만큼 완전하게 소생하거나 전면화 되지는 못했지만, 그 조건들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

문제는 왜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가 이며,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린다고 그냥 와주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계급투쟁의 부활만이 보장해 준다는 사실이다. 계급투쟁의 부활은 자본주의 쇠퇴가 만들어 놓은 물질적 조건(생존권 위협과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 만성적 위기 상황 등)에 의해 언제든 분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자각이며, 혁명조직은 계급적 자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계급운동은 잘못된 과거운동을 쇄신하거나 영광을 재현하려는 데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현재적 조건과 미래의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끊임없이 계급투쟁의 방향을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도전하도록 밀어붙여야 한다. 계급투쟁의 부활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만이 새로운 운동의 창출과 혁명적 의식의 생성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자주 등장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의제가 확장되었는데, 민주노동당을 포함하여, 진보신당, 사회당, 분파로서의 다함께 까지 이들 정당, 정치세력에 대한 정치적, 계급적 성격규정 문제가 토론되었다. 유럽의 좌파당 수준도 못되는 한국의 진보정당, 노동당에 대해 명확하게 부르주아 정당, 부르주아 정치의 한축으로 규정하자는 입장과 레닌의 규정에 따라 한국의 민주노동당도 부르주아적 노동자당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출되어 토론을 했으며, 대립보다는 보다 명료한 규정을 위해 추후 토론과제로 남겨두었다.

〈자본주의 경제위기〉

두 번째 주제는 자본주의 경제위기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쇠퇴에 기인하기 때문에 '현 위기와 쇠퇴하는 자본주의' 라는 발제문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1) **"현 위기는 순환적 위기에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인 위기가 중첩된 것, 즉 7–10년의 산업적 주기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통해 역사적으로(자본축적의 경제적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계급투쟁, 제국주의 국제관계 등의 정치 · 사회적 추세들을 포함한 구체 역사적 조건들을 매개하여) 누적되어 온 구조적 성격의 위기"** 라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자본주의 역사에서 '세계 대공황' 이라 할 만한 구조적 · 역사적 위기는 모두 3차례 있었는데 ①1929–38년 ②1973–82년 ③ 2007년–현재라는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위기(1929~38)는 제2차 세계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 과잉축적 자본을 확실히 파괴, 청산함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위기(1973~82)에서는 2차 세계대전 같이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공황, 과잉축적 청산과정을 거치지 못해, 과잉축적자본을 철저하게 청산할 수 없었다. 이것이 세 번째 위기에서는 누적되고 가중된 구조적 과잉축적 위기로 나타나 이번 2007년–08년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 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1929년의 월가의 거리 – 80년 만에 다시 자본주의 체제 몰락의 상징이 되다. 월가를 점령하라! 그리고 자본주의를 타도하라!

2) 그런데, 소위 사회주의 운동진영이라는 몇 몇 정치조직에서는 위와 같은 근거로 자본주의 쇠퇴를 주장하면, 자동붕괴론, 파국론 이라 왜곡하며, 자본주의 쇠퇴와 이행요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자본주의 쇠퇴론은 자본가계급에게서 정치권력을 빼앗는 사회주의혁명 없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권력 장악 없이 자본주의가 저절로 붕괴한다는 자동붕괴론을 단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 쇠퇴론은 사회주의혁명의 물질적 전제로서 생산력 발전이 충분히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숙을 넘어서 썩어 문드러져 갈 정도로(즉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와서) 사회주의혁명의 객관적 가능성과 그 절박성을 지시하는 것이지 자동붕괴의 임박함을 지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넘어 적극적인 해명과 근거 및 대안 제시, 공세적인 사상투쟁을 벌여나갈 필요성이 공감되었다.

가장 무거우면서도 현실적인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의 결론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고 개량주의로부터 대중 지도력을 전취하는 혁명정당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자본주의의 쇠퇴는 100년이 아니라 그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켜 주었다. 또한 이러한 자본주의 쇠퇴 규정의 실천적 의미로서 이행요구와 혁명당 건설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면서,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응은 더욱 정밀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과제도 동시에 떠안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문제의식 하나는, 발제문에서 자본주의 쇠퇴의 근거로 든 레닌 제국주의론의 옳았음을 넘어, 자본주의 쇠퇴의 객관화된 정립을 위해 로자 룩셈부르크, 폴 매틱, 그로스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거들을 제시하면서 토론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국제정세〉

세 번째 주제는 국제정세로서 리비아 혁명에 대한 자유토론이 있었다. 리비아의 현재 상황과 반군 내부의 상태, 나토군의 개입 정도에 대한 소통이 있었고, 아직 리비아 혁명과정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부재함 또한 확인했다.

"반미 반제 입장을 취하기만 하면 올바른 노선이라고 믿는 좌파들은 카다피를 방어. 지지해

왔는데, 여기에는 대부분의 스탈린주의 · 마오주의 정파들과 이들에게 견인된 일부 트로츠키주의 그룹들이 포함된다.”

부르주아 카다피 권력을 쫓아낸 리비아 1단계 민중혁명의 승리는 노동계급의 권력장악이라는 연속혁명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숙명론적 기권주의처럼 필연적으로 다른 부르주아 권력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이 토론에서는 먼저 국제주의 원칙으로부터 이탈한 위와 같은 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사상투쟁이 필요함을 공감하였다. 우리의 입장은 카다피가 본질적으로 반미 반제 투사도 아니지만,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카다피 체제는 리비아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며 지배하는 가장 먼저 타도해야 될 가장 악랄한 부르주아 최고 권력일 뿐임을 공유했다. 따라서 리비아 혁명에서 카다피를 방어하자는 스탈린주의적 반제국주의 노선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고, 대중봉기라는 운동의 기본적 성격 규정에 대해서 원칙적인 공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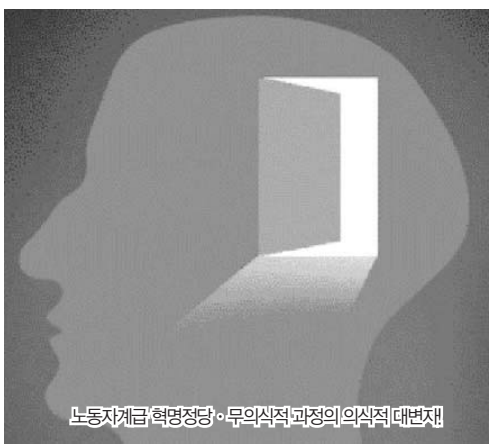
하지만, **“제국주의자들이 리비아 반군에게 무기와 물자를 보내고 싶어 한다면 의당 리비아 반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것을 받아야 한다.”** 는 구체적 상황판단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제출되었다.

아직 리비아 반군 내 혹은 대중봉기 흐름은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의 부재로 인해 부르주아 분파간의 내전양상이거나 또 다른 부르주아 지배체제의 완성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연관된 것에 한정하여 무장력 획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국주의 무기 사용에 대한 판단은 카다피 타도를 위한 수단이라는 현실 문제만이 아니라, 제국주의 의도와 혁명의 주체와 내전에 대한 국제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리비아의 급박한 상황은 무기획득에서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제국주의 무

기를 사용하는 -- 동시에 제국주의 개입에 반대하면서 --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국주의와 전쟁, 그리고 혁명에 대한 강령적 토론이 선행되어야 할 주제였고, 과거 사노위와 같이 적대적 두 입장이 대립되어 제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심화된 토론을 통해 보다 명료한 입장을 내오기로 했다.

〈역사와 계급의식〉


노동자계급 혁명정당 · 무의식적 과정의 의식적 대변자

마지막으로 계급의식과 계급무의식에 대해서는, 다수가 생소한 개념과 내용이라서 우선 문건을 제출한 배경 설명이 있었다. 문건을 제출한 오세철 동지는, 혁명과 파시즘의 시기를 모두 거치면서 계급의식을 맑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의 만남을 통해 분석한 빌헬름 라이히의 문제의식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혁명가, 혁명조직에 대해서도 혁명의 근본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는 늘 노동자 대중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을 알면서도 혁명적 낙관이나 과거 혁명의 경험을 믿으며 언젠가를 위해, 계급투쟁에 함께하며 대중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계급의 전투성, 혁명성에만 착목해왔다. 하지만 혁명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으로만 계급의식과 계급투쟁을 바라보는 입장은 계급의식의 다른 측면(계급무의식)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혁명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에 대한 철저하고 폭넓은 이해에 기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으로 삼는 혁명이론인 **"맑스주의를 올바로 세우는 것에서 나아가, 다시 한 번 총체성을 획득하는 맑스주의 방법론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계급의식」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의 "하나는 「물상화」의 이론적 발전을 통한**

계급의식 획득과 혁명의 가능성으로, 다른 하나는 맑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의 만남을 통한 계급무의식과 혁명의 가능성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고 제기했다.

두 문제 모두 전문적인 능력과 노력이 투여되어야 혁명조직과 노동자계급에게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기에, 토론회에 참가한 다수의 동지들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앞으로의 성과물을 기다리기로 했고, 오세철 동지의 노고에 대한 격려, 혁명운동에 대한 더 큰 공헌을 기대했다.

계급의식에 관한 토론은 다소 생소하고 현실 운동에 대한 반영이 어려운 주제였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현실 운동에서 부딪히고 느끼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에 다름 아니었다. 대중들이 투쟁에 나서지 않고, 대중들의 의식 안에 스스로를 억누르는 의식구조가 더 크게 작용하는 현상들은 운동의 비관이 아니라 계급무의식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오며〉

시간이 허락된다면 더 많은 주제들과 심화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싶었으나,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억누르는 무의식(배고픔)이 작용하여, 토론회는 저녁시간을 조금 넘겨 종료되었고, 다음의 더 치열하고 실천적인 공개토론회를 기약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유용한 무기를 제공하고자 ≪혁명≫이라는 정세지를 발행했다. 아직은 ≪혁명≫ 안에 정세와 계급투쟁의 전망을 모두 담을 수는 없는 조건이다. 하지만 작지만 명확한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현재의 정세를 담아내려 노력했다. 동시에 ≪혁명≫에 담긴 우리의 원칙과 입장들은 아직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토론된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에 머물지 않고 실천을 하려 한다.

실천은 우선 ≪혁명≫을 읽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동지들과 시작할 것이며, ≪혁명≫을 접해보지 못 했어도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는 노동자투사라면 누구라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우

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어도 적어도 우리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에 기반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조직이자 혁명을 추구하는 조직이라서, 모든 투쟁을 노동자계급 전체의 투쟁으로 만들려 노력하기 때문에,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혁명≫과 함께하고 지지하는 동지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실천 속에서 검증받는 원칙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 원칙이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만나 정련되고 풍부해지고 보편성을 얻어 다시 노동자투사들에게 돌아가는 날에는, 자본주의 체제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넓은 전망을 가지고 출발한다. **혁명**

이형로

[트리폴리에서 보내온 글] 이것은 철저한 민중혁명이다

번역 : 양재훈

[편집자] 이 글은 리비아 혁명의 한 참가자가 미국의 인터넷 신문 '사회주의노동자'(SocialistWorker.org)에 보내온 9월 20일자 반론 기고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국제사회주의자조직; ISO〉은 8월 23일자 '리비아에서 실제로 승리한 것은 누구인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사실상 리비아에서 승자는 리비아 민중이 아니라 나토(NATO)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기고 글은 리비아 혁명은 "철저한 민중혁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 이것은 철저한 민중혁명이었다. 트리폴리는 트리폴리 바깥의 반군에 의해 해방된 것이 아니다. 안으로부터, 8월 20일 트리폴리 시 전역의 많은 지구들에서 민중봉기가 시작되었다. 21일 낮에는 다수의 지구들에서 카다피 보안군이 완전히 박살났고, 다른 지구들에서는 무너져가고 있었다. 저녁때가 되어 반군들이 처음으로 트리폴리에 들어와서 보안군 잔당들과 교전을 벌였다.

8월 24일 카다피의 딸, Aisha의 집에서 기념촬영하는 반군

매 결정적인 국면마다 혁명을 추동한 힘은 대중들이었다. 벵가지와 서부 도시 진탄의 최초 봉기에서든 트리폴리 및 그 주변 지역의 봉기에서든 주민 대중들이 기본 동력을 이루었다.

오늘(9월 20일) 트리폴리의 거리들은 일반 민중들이 장악하여 다스리고 있다. 트리폴리 지구들마다 인민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각 지구 인민위원회는 산하의 무장한 소 지구위원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무장 소 지구위원회들은 그들 지구로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현재 경찰이 없는 상황에서(경찰은 이제 막 돌아오기 시작했다) 사실상의 치안행정 당국 역할을 하고 있다.

내 리비아인 친구 하나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세상이 다 뒤집어졌어." 지구 인민위원회들은 보안부대 건물들부터 카다피 궁에 이르기까지 구 지배계급 권력의 심장부들 내부를 공개했다. 누구든 지금 카다피의 별궁들을 거닐면서 구경할 수 있고, 보안부대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다. 지구 인민위원회들은 카다피의 저택들과 교도소들을 접수하여 일종의 박물관 같은 것으로 바꿔놓았다. 평범한 리비아 인민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돈으로 지은, 카다피의 딸 아이샤의 저택에 딸린 거대한 수영장은 이제 공공 수영장으로 바뀌었다. 몇몇 지구들에서는 주민들이 호텔과 레스토랑을 접수하여 카다피를 지지하는 그 소유주들을 내쫓고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봄 혁명 이후 이집트에 충만했었던 그 인민의 자기 권력 분위기, 불가능한 것을 상상했던 그 동일한 분위기가 여기서도 존재한다.

2 현재 혁명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세력들이 여럿 있다. 1) 지난 2월의 봉기 첫날 이래 트리폴리에서 운동을 이끌어온 트리폴리의 혁명적 지도자들. 이들은 나토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거의 없었다. 2) 트리폴리 출신 혁명가들로서 외부에, 벵가지나 튀니시아나 기타 외지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한 사람들로 지금 트리폴리로 돌아오고 있다. 3) 저명한 성직자들이 이끄는 이슬람주의 세력들. 4) 벵가지에 근거지를 두고 나토의 지원을 받는 국가과도위원회(NTC), 그리고 특히 그 안의 내각 역할을 하고 있는 NTC 집행위원회. 5) 트리폴리 출신 군 세력. 이들은 두 파벌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이전에 이슬람주의자였던 압델 하킴 벨하지의 지휘 아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전에 카다피 측근들이었던 인사들의 통제 아래 있다. 과거 미국 CIA가 카다피와 공모하여 체포해서 고문하고 투옥했었던 벨하지는 동부 리비아에서 일정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고, 카타르 정부가 뒤를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리비아 전역에서 온 약 40개의 반군 카타이바(병단).

구마 알-가마티 런던 주재 국가과도위원회 대표

이들 카타이바는 대부분이 소도시나 부족에 기반하여 조직되었고 재정도 보통 자체 독립적으로 꾸리고 있다. 많은 경우 카타이바들은 리비아 밖의 부유한 사업가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 카타이바들은 위에 언급한 집단들 그 누구의 권위 아래에도 들어가는 것을 거부해 왔다. 예를 들어 미스트라 병단은 트리폴리의 일부 지구를 접수하여 인민위원회들과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 세력 가운데 최종 승자가 누구일지는 전혀 불확실하다. 미국이 미는 NTC는 매우 취약하며 민중의 지지도 제한되어 있다. NTC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미 벵가지를 포함한 여러 도시들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9월 중순 현재 NTC는 여전히 나라의 지배권을 놓고 다양한 반군 그룹들 및 정파들과 경쟁하고 있다.

동시에 NTC는 서방과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현지의 UN군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해야만 했는데, 이는 많은 부분 거세게 올라오는 민중들의 압력 때문이었다.

3 반란 세력이 사분오열되어 있는 것은 카다피 지배의 특징에서 비롯한 결과물이다. 석유 자금(오일머니)에 의존하여

장기 집권한 카다피는 다른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류의 정치 제도들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리비아에는 집권당 같은 것이 없다. 관료집단도 그 규모가 매우 작으며, 군대도 취약하고 분열되어 있다. 카다피의 리비아에서 권력은 대개 비공식적이며, 카다피가 석유 자금을 하사하여 키우는 충성파 '장학생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행사되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인맥을 형성했는데 그 정중앙에 카다피가 있었다. 지배계급의 기반은 극히 협소했다. 일부 부족, 카다피 일가, 그리고 일군의 보안기관들이 카다피가 하사하는 '석유 장학금'의 주 수혜자들이었다.

1999년에 리비아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환했을 때도 경제 개방으로 수혜를 본 것은 지배계급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의 일부 층뿐이었다. 이집트, 튀지니, 시리아의 혁명과는 달리 지배계급의 한 부분이 이탈하여 반란 진영으로 넘어온 것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리비아 부르주아지의 이 부분, 특히 이전의 군 장성들과 각료들, 주요 기업가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의사, 변호사 같은 중간계급은 자신들의 세력이 거의 없는 가운데 전적으로 궐기한 민중들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

이 대중 동력 또한 카다피 지배의 특수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리비아 경제는 극히 미분화된 상태로서 대외무역이 거의 다변화되어 있지 않다. 카다피 집권 40년 동안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석유가 나라의 일차적인 경제활동이다. 몇몇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차치하면 국가 재정지출의 대부분이 카다피 '장학생'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아니면 대외 사업들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노동자계급도 규모가 극히 작다. 이웃

이집트와 튀니지에 비해 훨씬 작다. (다름 아닌 석유 부문 자체가 압도적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에 의존하고 있고, 소비재는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동시에 카다피 치하에서 인민들의 삶은 점점 더 곤궁해졌다. 집세와 식료품 가격이 치솟았는데도 임금은 거의 1980년대 수준에서 동결되었다. 약간의 국가 보조금도 신자유주의 전환으로 삭감되었다. 1990년대에 계속되는 유엔 금수 조치로 인해 석유부문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 시기에 국가 탄압도 계속되었다.

이들 요인이 결국 혁명을 낳았다. 그러나 이집트, 튀니지와는 달리 강력한 노동자계급의 결여(수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당들과 시민사회의 부재, 그리고 여기에 더해 시위 초장부터 카다피의 강경 학살 진압으로 리비아의 투쟁은 무장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무장 투쟁은 구 지배계급에서 떨어져 나온 분파의 지휘 아래 들어갔지만, 이것은 무작위의 우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반란에 나선 청년들은 자신의 부족이나 출신 소도시들에 기반을 둔 혁명 그룹에 들어갔고, 어느 사업가가 자신들에게 무기와 차량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 갈렸다. 반란자들의 정치적 수준은 매우 낮다. 반군의 승리에 재앙처럼 따라붙은 사악한 인종주의도 이 때문이다.

4 혁명의 민중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에서 정치구조의 취약성으로 볼 때 혁명으로부터 좌익 세력이 솟아나올 전망은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카다피 치하에서 그러한 전망은 더 희박했었다. 그리고 지금 혁명은 리비아 사회에 그러한 상황 발전이 일어날 공간과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 조건이 빨리 오지 않을 수 있다. 거기에는 경제의 재편과 노동자계급의 성장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리비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회를 맞고 있다. 이 이유만으로도 이 혁명은 지지받아야 한다. 더욱이 이 혁명의 승리가 아랍 세계 전역에 걸쳐 -- 특히 시리아와 예멘에서 -- 봉기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정상에 오를 세력이 카다피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배를 계속하리라는 것은 가능하다. 누가 리비아 혁명의 궁극

적인 승리자가 될 것인지를 말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최종 결말을 결정하려고 하는 세력이 누군지 알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계속해서 혁명을 자신들의 이익에 종속시키려고 한다. 제국주의 세력들은 반란 진영 가운데 국민적 기반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세력을 밀어 왔다. 그리고 이것은 아랍 혁명들의 행로에 대한 통제권을 틀어쥐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저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자신들의 필요에 복무하는 제한된, 관리된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 활동가들에게 놓인 주된 임무는 이러한 현실과 대면하고, 리비아 혁명이 성장할 공간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혁명**

계급의식과 파시즘의 계급무의식의 대립구조

오세철

나는 ≪혁명≫ 창간준비 2호에 실린 '계급의식, 계급무의식 그리고 혁명'라는 이론적 도입 글에서 계급의식에 대한 긍정적 확신을 통한 혁명의 필연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자본주의의 가치법칙에 종속되어 그 형식을 뛰어넘는 혁명의 불가능성을 말하는 비관론적 접근 모두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맑스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정치경제와 의식의 통합을 말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맑스 이후의 조야한 경제결정론과 그에 대한 왜곡된 반작용으로서의 자발성주의는 맑스주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임을 지적했다.

또한 글을 마무리하면서 "맑스, 트로츠키, 라이히 등 계급 조건화된 계급무의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맑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욕망과 그 억압, 그 구체적 형태에 대한 인식이 자본주의 철폐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사회 건설 계획의 일부임을 확인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글에서는 라이히를 통해 맑스주의 심리학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파시즘 분석을 통해 노동자대중의 계급무의식의 억압구조와 혁명의 반혁명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한다.

1. 계급의식에 대한 라이히의 문제의식

맑스주의의 혁명적 실천을 위한 성정치 운동을 전개한 라이히는 1930년 11월, 맑스주의 노동자학교에서 '맑스주의와 심리학', '성학'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 성개혁 단체는 80여개가 있었고 회원은 3만5천명 정도였다. 이는 그가 독일공산당 집행위원회에 공산주의 기초 위에서 성정치적 대중조직의 창설을 제안한 성과였다. 그는 분산된 성정치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필수적인 요소인 성억압과 성빈곤에 주목했다.

그는 히틀러의 프로그램이 보통 인간의 성격구조의 반영이라고 보았고, 성행복과 자유를 향한 대중의 갈망과 두려움의 대립 속에서, 대중 스스로 삶을 책임지려는 투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었던 히틀러에게 의존하게 된 파시즘의 심리구조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1932년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파시즘의 대중심리≫를 쓴다. 그는 1933년 11월, 독일공산당에서 제명되었고, 1934년 ≪계급의식이란 무엇인가≫를 발표한다. 그 글에서 그는 ≪파시즘의 대중심리≫ 후에 제기되어 온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 말하고 독일에서의 사회주의 운동의 심각한 패배가 다른 나라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으며, 파시즘이 오늘날 도처에서 혁명운동에 대해 빠르게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자본주의의 멍에로부터 해방을 투쟁 목표로 삼는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혁명가들의 노력이나 고통, 의도를 아예 모르거나 조금밖에 모르는데, 이는 예속된 그들 자신들의 존재를 점점 더 무의식적으로 이끌어가며, 그러한 방식으로 자본의 지배를 위한 지지대가 된다고 보았다. ≪계급의식이란 무엇인가≫의 글은 비정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혁명의 미래 지도자들에게 하는 호소라고 하면서, "'역사적 과정'에 대한 파악을 적지 않게 고집하면서 더 잘 이해하라는, 그들의 현실 문제들과 욕망들을 더 적절하게 밝히라는, 역사에서 '주체적 요소'에 대해 좀 덜 이론적으로 파악하라는, 대중의 삶에서 주체적 요소가 나타내는 것들을 더 잘 이해하라는 호소"임을 강조한다.[1)]

그는 가까운 미래에 독일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봉기의 가능성을 내다보면서도 노동자 운동이 이론과 조직 면에서 한 번 더 결집하려면 몇 년이 더 필요하다는 것과 새롭고 훌륭하며 신뢰할 만한 지도부 아래 노동자 운동의 결집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정세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 당시 맑스주의자(공

1) 빌헬름 라이히, 윤수종 옮김, ≪성정치≫ 중원문화, 2011, '계급의식이란 무엇인가?', 257쪽

산주의자)가 주체적인 요소들의 실천을 관념론자들에게 맡겨두었고, 기계론적이고 경제적인 유물론자들처럼 행동했다고 비판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노동하는 인간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하고 권력을 투표소에서가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장악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며, 그 이상을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공표하고 이를 강령 속에 고정하는 것은 이전에 모두 시도했었기 때문에 별로 가치 없을 것이다. 중요한 질문은 왜 인민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왜 우리의 조직은 동맥경화증에 걸렸는가, 왜 대중 스스로를 우리의 관료제에 의해 질식되도록 내버려두었는가, 왜 대중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이익과는 반대될 히틀러가 권력을 획득하도록 했는가 이다."[2]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계급 상황으로부터 '의식'을 불러내고 그 의식은 사실이지만 자본의 지배를 뒤흔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자본의 지배를 뒤흔들기 위해서는 견고하게 조직된 당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 당시 독일 노동자의 상황을 설명한다.

"독일에는 대략 3천만 명의 반(反) 자본주의적인 노동자들(사회혁명을 일으키기에 숫자로서는 충분한)이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가장 완강한 반자본주의적인 심성의 도움으로 파시즘은 권력을 장악하였다. 반자본주의적인 심성은 계급의식인가? 아니면 단지 계급의식의 시작일 뿐인가? 계급의식이 만들어지는 전제조건일 뿐인가?"[3]

사회주의는 사회적 생산력이 모든 나라의 가장 광범위한 대중에게 사회의 평균적 문화에 상응하는 삶을 확보해주도록 충분히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정치적 반동이 설파하는 체념의 원리에 대항하여 지상에서의 풍요로운 행복의 원리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정점에 파시즘과 교회를 두고 있는 정치적 반동은 대중이 현세에서의 행복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치적 반동은 정조(순결), 복종, 자기부정, 민족과 인민의 조국을 위한 희생을 요구한다. 문제는 반동들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이런 요구에 순응함으로써 그 반동들을 지지하고 반동들이 살찌도록 하여 그들의 힘을 키우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4]

그는 부르주아 질서에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 전복의 싹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무엇이든 계급의식의 요소로 보면서 부르주아 질서와의 유대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고 부르주아 질서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무엇이든 계급의식의 방해물이라고 말한다. 보기를 들어 1919년 11월 독일 혁명기간 동안 대중이 베를린에 있는 동물원에서 시위를 하면서 시

2) 윗글, 253쪽
3) 윗글, 257쪽
4) 윗글, 266쪽

바이에른의 첫 번째 고속도로 건설 시공식에서 히틀러식 경례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 초기의 파시즘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위자의 대부분이 잔디를 밟지 않으려고 한 행동이 혁명 담지자들의 부르주아지화의 모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5]

특히 계급의식의 구체적 요소를 청소년, 여성, 성인 남성 노동자, 어린이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시도는 눈여겨 볼만하다. 청소년의 경우 권위주의적 억압, 국가 권위의 집행인들의 부모에 대한 반항을 정치적인 좌익의 흐름으로 보는 반면, 스포츠에 대한 열광, 군복을 입은 남성과 행진곡을 좋아하는 것은 반혁명적인 요소로 본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경제적 독립, 남성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성적 독립을 중요한 계급의식의 요소라고 주장한다. 성인 남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집합적 산업노동이 계급 감정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지, 공장에서 일한다는 것과 노동조합원이라는 사실이 계급의식을 높인다고 보지 않는다. 노동의 '명예', 노동자와 고용주의 '평등', 공장과 민족의 통일 등에 대한 나치의 선전은, 평균적인 노동자가 사회민주당의 '산업평화론'을 흡수한다면 그들을 눈멀게 하여 파시스트로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관념의 물질적 힘이 물질적 빈곤의 힘보다 더욱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린이의 경우에 배고픔, 영양부족은 그 자체로 혁명적이지 못하며, 자산가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오히려 질투, 비굴함과 절제를 가져온다고 보고 혁명적 감정의 발전에 제동을 걸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착하다'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투쟁이 프롤레타리아 전선의 중요한 과제임을 말하고 있다.

노동자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서의 개량주의와 관료주의를 무조건 비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노동자들이 개량주의와 관료주의를 받아들였는가를 따져야 한다. 사회주의 운동 지도부의 과제는 '공산주의 강령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나 '대중을 계급의식 있는 투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적 과정을 연구하는 것과 더불어 이미 거기에 있는 혁명적 본능을 발전시키는 데 있으

5) 윗 글, 271쪽

며, 동시에 이러한 혁명적 본능을 프롤레타리아와 소부르주아 그리고 농민층 속에서 발전시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주의 과학은 '과학' 위에 '계급투쟁'의 구호를 붙임으로써 발전시킬 수 없으며, 오직 과학 자체의 개별 분야들의 질문들, 문제들, 발견들로부터만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부르주아 과학이 어디서 실패했고, 왜 실패했는가, 부르주아 세계관이 어디서, 어떻게 지식의 장애물인가를 사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6]

보기를 들어 프로이트를 '반동'이라고 폭로함으로써 프로이트의 학문적 실수에 대한 '맑스주의적' 공격을 개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그보다는 프로이트가 어디에서 천재적인 자연과학자이고, 어디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부르주아 철학자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진지하고 유용한 맑스주의적인 혁명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그는 혁명에 대한 대중의 불안이 계급의식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다. 광범위한 비정치적 대중은 공산주의자들을 '폭력적인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견해는 공산주의 운동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대중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평화와 고요를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은 공산주의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으려고 한다. 민족사회주의(나치)운동의 중요한 힘 가운데 하나는 '독일혁명'이라는 환상 위에 비폭력적인 권력 장악을 약속하여 무의식적으로 대중의 혁명적 소망과 평화주의적 소망, 둘 모두에 호소하였다는 사실이다. 혁명운동의 대중적 기반이 넓으면 넓을수록 폭력을 덜 필요하게 되고 대중은 그들의 혁명에 대한 불안을 더욱 더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공산당 지도부가 경찰과 군대가 물리적 억압기구임은 사실이나 경찰과 군인이 프롤레타리아, 농민, 그리고 피고용인의 아들임을 잊지 말 것을 환기시키면서 프러시아 경찰의 다수가 사회민주당원임을 지적하고 있다.[7]

라이히가 주창하는 성정치 운동은 주관적 욕구로부터 사회혁명의 필요성을 발전시킴으로써, 그리고 대중의 욕구를 '과연'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 하는 모든 정치적 쟁점을 밝힘으로써, 모든 수준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혼돈스러운 인민들 사이에서조차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강령적 요구도 대중심리학의 측면에서 '우리는 대자본가들을 몰수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올바른 관리 아래 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 강령적 요구에 대해 비정치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왜

6) 윗 글, 332쪽
7) 윗 글, 350쪽

곡된 평균적인 산업노동자는 마치 자신이 남의 소유를 장악한 것처럼 범죄의식과 어떤 금기를 지닌 채 반응할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동에 근거한 자신의 정당한 소유권을 의식하게 되어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이라는 부르주아 관념이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방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이다.

결론적으로 라이히는 계급의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혁명지도자는 잉여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으로 생산한 물건이 기업가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것이 계급의식이다. 그러면 노동자는 단지 연대의 의미에서나 노조의 직장대표가 자신에게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서 파업할 것이며, 어떤 노동조합 지도자도 다시는 노동자를 기만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혁명적 선전은 본질적으로 소극적 비판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혁명적 선전은 또한 건설적이고 적극적일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8]

2. 파시즘에 대한 라이히의 문제의식

1932년 ≪파시즘의 대중심리≫가 출간된 후 10년만인 1942년 8월, 그는 중보개정 3판의 머리글에서 관념철학 흐름, 즉 인간의 구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수용을 거부하고 사회적 조건과 변동이 인간의 원천인 생물학적 요구를 변화시켜 그것을 성격구조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 그 성격구조는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사회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파시즘은 그것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든 간에 인민 대중들에 의해 탄생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대중들 개인의 성격 구조에 존재하는 모든 특성과 모순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순수하게 반동적 운동이 아니고 반역적 정서와 반동적 사회사상의 결합이라고 지적한다.[9] 그 성경제학 이론의 위험을 1934-37년 사이에 유럽의 파시스트 집단에게 경고한 것은 파시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공산당원들이었다. 따라서 파시즘은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행동이 아니라 '대중의 비합리적 구조의 표현'이다. 그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의사로서 나는 어떤 정당정치가도 알지 못

8) 윗 글, 350쪽
9) 빌헬름 라이히, (오세철 옮김), ≪파시즘의 대중심리≫, 현상과 인식, 1986, 16-18쪽

했을 각국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정당 정치가들은 '노동계급'만을 알 뿐이며 그들에게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려 할 뿐이었다. 나는 있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회적 상황 -- 인간 자신이 만들고 자신의 성격의 한 부분으로서 내부에 가지고 있는 상황 -- 의 지배 아래 있으며 또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나 수포로 돌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을 파악하였다."[10]

그는 소련에서조차도 국가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엄격한 의미에서의 맑스 개념으로 보면 경직된 국가자본주의만이 존재할 뿐이라며 러시아를 혁명 이후의 '붉은 파시즘'에 기반한 비합리적 권력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코끼리(성 억압의 6천년)를 여우굴(300년의 자본주의) 속에 강제로 밀어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지난 300년간의 사회적 대책은 더 이상 파시즘이라는 대중적 페스트에 대처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1931년 독일 사회구성에서 산업노동자 비중이 60%였지만 계급의 이데올로기적 분포에서는 경제적 프롤레타리아가 30%, 하층 중간계급이 70%를 차지했는데 그 분포는 1921년 선거의 수치와 비슷했음을 입증한다. 그 선거에서 공산당, 사회민주당이 1,200-1,300만 표, 민족사회당(NSDAP)와 독일국가당은 1,900-2,000만 표를 획득하였다.[11] 근본적 문제는 경제적 상황과 대중들의 심적 구조(이데올로기)의 불일치, 심리구조와 심리구조가 표출된 경제적 토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길이다. 배고픈 사람이 도둑질하고 착취당한 노동자가 파업을 일으키는 사실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 중 대부분은 왜 도둑질하지 않으며,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왜 파업하지 않는가의 문제이다. 파시즘은 두 측면에서 노동자 집단에 침투했는데, 룸펜프롤레타리아에게는 직접적인 물질적 매수를 통해, 그리고 노동자 계급에게는 물질적 매수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을 수단으로 한 '노동자 독재'를 통해서였다. 따라서 노

비참함과 보수주의적 사고 사이의 모순에 따른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실망은 다른 혁명조직이 없을 경우 틀림없이 파시즘으로 이끌리게 된다는 말이다

10) 윗 책, 27쪽
11) 윗 책, 45-47쪽

동자가 혁명 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혁명당 지도부가 올바른가에 달려있다. 파시즘의 권력 장악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사회민주당의 정책이었다는 공산주의자의 주장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옳았다고 볼 수 있다. 비참함과 보수주의적 사고 사이의 모순에 따른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실망은 다른 혁명조직이 없을 경우 틀림없이 파시즘으로 이끌리게 된다는 말이다.

그 당시의 통속적 맑스주의는 이데올로기의 구조와 역동성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비판하는 라이히는 그들이 '맑스적'이 될 수 없는 '심리학'이라는 이유로 이데올로기를 무시하고 있으며, 역사에 있어서 '심적 생활'인 주체적 요인의 취급을 정치적 반동의 형이상학적 관념론에게, 그리고 '정신'과 '영혼'만이 유일하게 역사적 진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12]

이어서 그는 독일 파시즘의 이론적 축으로서의 인종이론을 비판하고 나치의 깃발인 스와스티카의 상징, "우리는 스와스티카의 군대이다 / 독일 노동자를 위해 / 그리고 우리가 밟고 지나갈 자유에로의 길을 위해 / 붉은 깃발을 높이 올리자"에 대한 분석을 한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가족 분석에서는 반혁명운동이 하층 중간계급의 경제적 생존 양식과 이데올로기적 신비주의가 결합된 정치적 반동의 근거지로 시작된다고 본다. 신비주의(종교)에 대해 투쟁하는 성 경제학에 대해서는 첫째, 신의 개념, 원죄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심판의 이데올로기(사회에 의해 생산되고 가족 속에서 재생산되는)가 어떻게 개인들 속에 깊이 고착되는가? 둘째, 언제 이러한 종교의 개념들이 인간 속에 깊이 고착되는가? 셋째, 이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에너지가 사용되는가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련과 스탈린주의에 대한 라이히의 분석은 파시즘에 대한 문제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1919년 소련 공산당 제8차 대회에서 확립된 소비에트 민주주의를 선언한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하면서, 스탈린의 소비에트 민주주의가 레닌의 사회민주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듯이, 파시즘도 부르주아 계급지배와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파시즘이 스스로를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이라고 자처함으로써 사회주의자들이 충족시켜주지 못한 기능을 떠맡았으며, 산업부호들을 지배함으로써 자본주의를 떠맡았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러한 라이히의 성경제학과 실천운동은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혹독한 비판도 받았다.[13]

---

12) 윗 책, 45-49쪽
13) 아래 보기를 드는 비판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라이히의 책 People in Trouble (New York: Farrar, Strauss & Giroux, 1976) 180-184쪽을 볼 것

"그렇다면 오로지 배고픔과 성욕만이 역사적 원동력이란 말인가? … 이러한 넌센스는 경제적 기반에 대한 투쟁들로부터 인민을 왜곡시킬 뿐이다."

"성적 억압에 두 계급이 포함된다는 라이히의 생각은 계급의 적대감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의 책 ≪청년의 성 투쟁≫에서 세대 사이의 적대감을 강조한 것은 더욱 고약하다. 이는 계급투쟁이 착취와 참상에 대한 정치적 투쟁에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저버리고 가족 상황에 눈을 돌리게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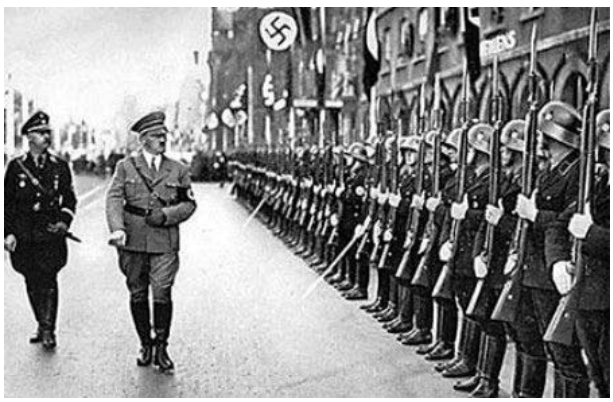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편협한 맑스주의에 대한 독해와 실천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라이히는 성적 참상의 사회적 기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기반의 변동을 통해서만 성해방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3. 종합

맑스와 엥겔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형적 심리사회구조가 세계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라이히가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큰 자극제가 되었다. 그 중 하나는 히틀러

파시즘은 권위주의적 기계 문명 속에서 억압된 인간의 정서적인 태도이다. 그것은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행위가 아니라 반역적 감정과 반동적 사회사상의 결합이며 보편적 인간 성격의 비합리적 반응의 총체이다. 독일 뮌헨에서의 무쏠리니와 히틀러.

의 파시즘이었고 다른 하나는 스탈린의 '붉은 파시즘'(이 주제는 연재3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이었다. 파시즘의 출현이야말로 라이히의 성 경제이론의 현대적 검증을 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



히틀러의 인종개념은 유대인에 대한 성적 공포와 더불어 자본가에 대한 대중의 증오를 유대인에게 돌리게 했다

파시즘은 권위주의적 기계 문명 속에서 억압된 인간의 정서적인 태도이며 기계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생활 개념이다. 그것은 반역적 감정과 반동적 사회사상의 결합이며 보편적 인간 성격의 비합리적 반응의 총체이다. 그것은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행위가 아니라 대중의 비합리적 성격의 표현이다. 인간의 원시적인 물질적 욕구의 억압은 반역을 유발하는 반면, 성의 억압은 도덕적 방어로 닻을 내리게 하여 무의식적으로 모순, 억압에 대항하는 혁명을 제지하는 반동적 힘을 갖게 한다. 이는 보수주의와 자유에의 공포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의 억압은 정치적 반동으로 이끌고 대중을 피동적이고 반정치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인간의 성격구조에 제2차적인 힘, 곧 권위주의적 질서를 지지하게 하는 가상적 이해관계를 만들어낸다.

히틀러는 바로 이러한 대중의 혁명에 대한 공포 때문에 성공했다고 라이히는 말한다. 그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혁명적, 반자본주의적, 공산주의적 열망에 환상적인 만족을 주었으나 독일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대중 심리 구조의 모순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경제적 위기가 노동계급의 욕망과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다면 대중이 혁명을 원하고 자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평균적 인간의 모순은 세계가 변혁되기를 바라나 그 변혁이 착취와 억압처럼 갑자기 위에서 부여되기를 원하는 데 있다.

히틀러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명하지 않은 자유를 분명히 나타내는 민족적 자유의 환상으로 대체시키고 대중에게 책임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나오고 자신의 체제를 변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종(race)개념은 대중의 일반적인 성적 자아상을 만족시키는 구실이 되었다. 이 말은 원래 순수하고 강하며 독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독에 걸린 것 같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에 독이 들어갔음

을 뜻하는 매독으로부터 '순수한 피'를 보호하자는 약속은 중요한 것이었다. 유대인에 대한 성적 공포와 더불어 자본가에 대한 대중의 증오를 유대인에게 돌리게 했다. 유대인은 자본가에 대한 사회주의적 증오뿐만 아니라 성적 불안의 표적이기도 했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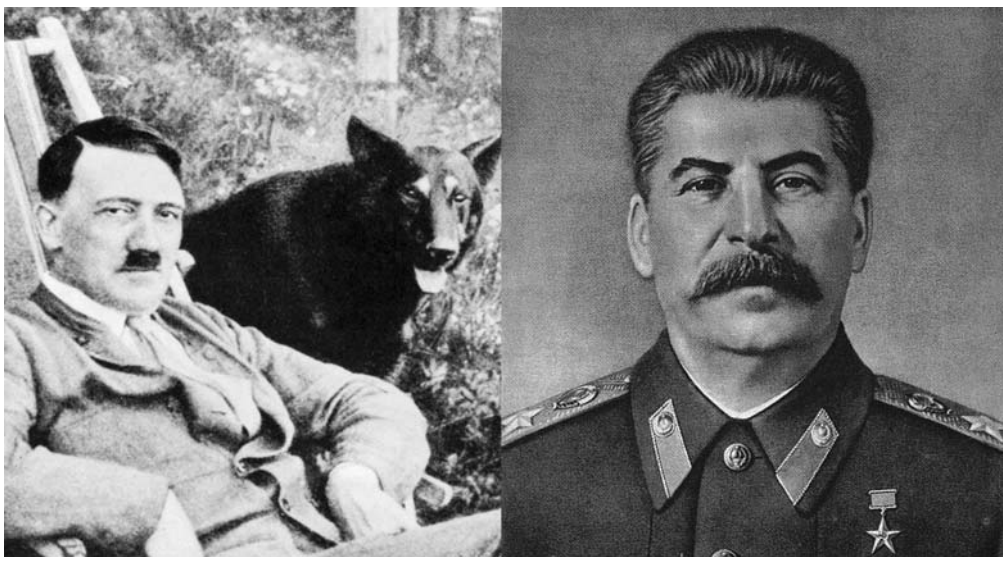
여기서 인종이론과 결부되어 강조되었던 것은 가족 이념이었다. 가부장국가는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서 재생산되므로 절대국가와 전체주의는 가족이념을 강조한다. 그 결과 '볼셰비키의 문화 혼돈'으로부터 가족과 국가를 보존한다고 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 사고를 파괴하고 파시즘의 폭정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 두 가지 효과를 달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말하자면 파시즘의 구조는 형이상학적 사고, 추상적 윤리사상에의 강박관념, 총통의 신성예정설이 대중의 심리구조와 영합함으로써 모든 민족사회주의당(나치당)의 당원이 스스로 '작은 히틀러'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파시즘의 승리는 대중의 자유능력 상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대중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능력상실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공포를 심어준 어린이와 청소년 시절의 성의 억압에 있다는 것이 바로 라이히가 꿰뚫어본 것이었다.

파시즘도 대중의 사회주의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계급 타파를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는 맑스주의가 그 당시 독일 사회에서 실패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할 필요를 느낀다. 맑스주의는 심리학이 아니기 때문이 인간의 불안과 고통의 사회적 기원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모순의 구조를 갖는 비성숙한 대중의 성격구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곧, 사회적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대중이 심리구조적으로 성숙한 후,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는 책임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까지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다.

성격구조는 자본가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유주의적 자본가도 있고 반동적 노동자도 있다.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맑스의 명제는 두 가지 질문을 남기고 있다. 첫째,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며 인간의 두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과, 둘째, 그렇게 형성된 의식(성격구조)이 어떻게 다시 경제과정에 반응하는가 이다.

라이히는 소련에 진정한 사회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엄격한 의미의 맑스의 개념으로 보면 소련은 경직된 국가자본주의일 따름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사용경제가 아닌 교환경제, 임노동, 잉여생산으로부터 나온다. 그 잉여가 진정한 사회가 아닌 국가에 귀속되거나 개인에 귀속된다면 그것은 모두 자본주의이다. 따라서 소련은 대중이 '비합리적'으로 유린되고 권위에 대한 갈망이 존속하

14) W. Reich, People in Trouble, 167쪽



파시즘 또는 스탈린주의 같은 이른바 '국가 사회주의'는 넌센스이며 대중기만이다. 완벽한 통제를 향한 열망과 공포, 불안을 이용한 통제 방식에서 유사하다.

는 한 파시즘 구조로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는 국제적 규모에서만 그 의의가 있다. 파시즘 또는 스탈린주의 같은 이른바 '국가사회주의'는 넌센스이며 대중기만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의 흥성도 있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인간의 성숙한 성격구조나 이념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프랑스의 도리오와 라발, 러시아의 스탈린, 핀란드의 아네르하임, 헝가리의 호시 같은 민족주의적 독재자를 양산한 것이다. 붉은 파시즘으로서의 스탈린주의는 조직화된 정서적 전염병(emotional plague)이며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파괴한다. 진정한 맑스주의는 '사회'라는 말이 '국가'로 대체되고 국제적 인류가 민족적 애국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이다.

프로이트는 본능이 승화되지 않으면 문명발전이 없다고 했다. 그에 있어서 문명은 인간을 자연에 대립시켜 보호하고 그 상호관계에 적응하게 하는 기관으로 보고 그를 통하여 인간성을 예술적이고 이념적인 보다 높은 심리적 활동으로 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라이히는 프로이트나 신프로이트학파를 넘어서서 사회와 인간의 깊은 구조를 발견하는 데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그는 맑스주의 의식의 개념을 따랐으나 거기에 그람시의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 곧 지배계급의 이념이 사회기관에 의해 전수됨으로써 지배이념이 되는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심리적 억압을 다루고 있다.[15]

15) P. Brown, "Civilazation and its dispossessed : Wilhelm Reich's Correlation of Sexual and Political Repression," P. Brown (엮음), Radical Psychology, (New York : Harper, 1973) 244–256쪽

"사회적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대중이 심리 구조적으로 성숙한 후,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는 책임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까지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가 보는 역사, 사회, 인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6]

첫째, 객관적 사회과정과 그 과정의 주체적 경험은 분리되어야 하며 각각의 과정은 스스로의 법칙에 따르고 다른 에너지 원천을 가지고 있다. 둘째, 지도자는 항상 대중의지, 곧 평균적 인간 구조의 반영이다. 진보적인 동시에 반동적인 구조를 가진 평균적 인간의 모순과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사고와 행동은 자기 모순적이다. 이러한 구조는 가족 속에서 준비되고 국가구조 속에서 그 효과가 지속된다. 그리고 가족의 문제, 곧 성적 조건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보다 모든 면에서 더 오래됐고 중요하다. 이는 가족의 변화가 세계의 인간 기술 정복의 변화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셋째, 경제와 이념은 단순한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경제는 이념을 결정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발달 과정에서 서로 모순될 때도 있다. 넷째, 기술적으로 말해 역사의 원동력은 생물학적 에너지, 오르곤 에너지이다. 이는 성적 감정과 행복을 위한 욕망으로 표현되는데 정치, 사회, 경제적 조건의 제약을 받는다. 다섯째, 공동사회의 생물학적 에너지의 표현이 그 제약을 넘어서면 러시아에서 본 것처럼 퇴행이 불가피하다. 파시즘에서는 대중의 에너지가 정신적, 물질적 참상을 가져올 만큼 퇴행했는데 그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섯째, 독일 사회에서 진보적 과정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와 정치적 반동세력이 대중의 에너지를 그들의 이해에 맞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파시즘을 구성하였다.

물론 라이히가 파시즘의 비합리성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중정치운동 대신 성정치의 실천을 함으로써 깊은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안이함을 보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이론의 공헌은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구조에 대한 깊은 인식, 그것의 억압으로 나타난 대중심리구조의 반역적이고 반동적인 구조, 다시 이와 엇물리는 사회, 경제, 정치구조와 이념의 역동적 체계를 총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점일 것이다. 공산주의를 향한 사회변동이 성숙한 인간구조의 전제 없이는 반동적 파시즘과 반혁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세계혁명의 총체적 전략을 위한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다. **혁명**

16) W. Reich, People in Trouble, 170–172쪽

[토론회 발제문]

현 위기와 쇠퇴하는 자본주의

양효식

'금융위기'라고 불리는 현 위기의 본질적 성격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이다. 왜 체제 위기인가? 산업순환 위기(주기적 과잉생산 공황)를 넘어 역사적으로 1973년 이래 계속되어 온 구조적인 과잉축적 모순이 더 이상 봉합되지 못하여 마침내 폭발한 위기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 구조적 위기

최근 30여 년 동안만 보더라도 7년 내지 10년에 한 번 씩 터져 나오는 순환적 공황들이 3-4 차례 있었지만, 자본가계급이 대대적인 경기부양과 거품경제를 일으켜 한 두 해만에 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현재의 공황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 이래 최대의 공황", 또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라고 저들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두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으로도 틀어막지 못한 채 지금까지 4년째 계속되고 있고, 나아가 심화되고 있다. (2009년 하반기에서2010년 중반 동안 일시적으로 회복의 기미들이 미약하게 나타났었는데, 이것이 자본가들로 하여금 '세계경제 위기는 끝났다'라고 잠시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정확히 말해서 현 위기는 순환적 위기에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인 위기가 중첩된 것이다. '역사적'이라 함은 7-10년의 산업적 주기('경기변동' 주기)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통해 역사적으로(자본축적의 경제적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계급투쟁, 제국주의 국제관계 등의 정치 · 사회적 추세들을 포함한 구체 역사적 조건들을 매개하여) 누적되어 온 구조적 성격의 위기라는 뜻이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주기적 공황은 무수히

많았지만 '세계 대공황'이라 할 만한 구조적 · 역사적 위기는 이번 위기까지 포함해서 모두 3차례이다. ①1929-38년 ②1973-82년 ③ 2007년-현재.

첫 번째 대위기는 최종적으로 제2차 세계 제국주의 전쟁을 거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쟁을 통해 과잉축적 자본을 확실히 파괴, 청산함으로써 1945-73년의 장기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장기호황 기간을 거치며 이윤율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 생산에 투자되지 못한 잉여자본이 비생산적 투기로 몰리면서 거대한 투기 거품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한 인플레와 여기에 기름을 부은 1973년 오일쇼크(유가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자본가 정부들이 긴축정책을 폈는데 이것이 투기 거품을 꺼뜨리면서 공황을 폭발시켰다. 이것이 두 번째 대위기이다. 1973년부터 1982년까지의 이 두 번째 대위기 동안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 폭락, 기업도산, 실업급증 등 과잉자본 파괴 과정이 진행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만큼 철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이윤율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 이 두 번째 대위기는 첫 번째 대위기에 비해 과잉자본 파괴 면에서 훨씬 덜 폭력적인 공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가 1930년대와 같은 계급투쟁 격화와 파시즘 · 세계대전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았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과잉축적 자본을 제대로 털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1980년대에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공세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에 와서는 동구권과 중국이 세계자본주의 체제로 통합되면서 미국 주도의 본격적인 세계화(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에 들어갔다. 이 1980년대 초부터 2007년까지 약 30년간의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기의 성격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 강화와 금융투기 거품을 통해 이윤율 하락 및 과잉축적 위기(1973년-82년의 공황으로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과잉축적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위기를 누적적으로 가중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누적되고 가중된 구조적 과잉축적 위기가 이번 2007년-08년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자동붕괴론? 파국론?

현재 우리는 이 세 번째 대위기의 초입부를 통과하고 있다. 말이 '초입부 통과'이지 이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계급은 정리해고, 임금 연금 삭감, 단협 개악, 비정규직 양산, 청년실업 만연 등 자본의 위기를 온통 전가 당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전가에 맞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전체적으로 방어적 성격의 투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아무리 깊은 위기라 하더라도 저절로 죽어 없어지지는 않는다. 자본주

의의 '최종 위기' 같은 없다. 자본주의는 내재적인 붕괴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저절로 죽어 없어진다는 의미의 '자동붕괴'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비난조로 말하는 소위 자동붕괴론은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노동자계급이 앉아서 위기 전가를 당하길 거부하고 저항에 나서서 이 저항을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끌어올려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을 빼앗을 때만이 자본주의를 폐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는 한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을 희생시킨 폐허 위에서 언제든 다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무한정 계속되는 상시적 영구적 위기, 계급투쟁으로 매개되지 않는, 자동붕괴를 눈앞에 둔 무매개적 위기 같은 것은 없다. 파국론이나 자동붕괴론은 혁명적 맑스주와 양립할 수 없다.

현 위기는 첫 번째 대위기 못지않게 '사회주의냐 야만이냐'의 문제를 제기한다. 첫 번째 세계대공황 시기에는 사민주의와 스탈린주의, 코민테른의 타락 등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숨통을 끊는 사회주의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계급투쟁에 패배하여 파시즘과 전쟁 같은 야만을 불러들이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는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 이 시기에 자본주의가 아직 충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동적인 활력을 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이미 쇠퇴하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단계의 사멸하는 자본주의로서, 레닌이 말한 "프롤레타리아 사회혁명의 전야"에 있는 자본주의였다. 다만 문제는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가 였다.

사노위나 다함께(그리고 SWP) 같은 많은 좌파들이 제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가 장기호황을 누렸다는 것을 근거로 레닌을 비롯한 초기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의 '사멸하는 자본주의', '쇠퇴하는 자본주의' 론은 자동붕괴론 또는 파국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트로츠키가 1938년에 제출한 이행강령(즉 '자본주의의 단말마적 고통과 제4인터의 임무')도 이런 자본주의 파국론에 기초한 문서라고 비판한다.

'사멸하는 자본주의', '쇠퇴하는 자본주의' 론이 자본가계급에게서 정치권력을 빼앗는 사회주의혁명 없이, 즉 자본주의의 숨통을 끊을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권력 장악 없이 자본주의가 저절로 붕괴한다는 자동붕괴론이었는가? 사멸하는 자본주의론, 쇠퇴기 자본주의론은 사회주의혁명의 물질적 전제로서 생산력 발전이 충분히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숙을 넘어서 썩어 문드러져 갈 정도로 (즉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와서) 사회주의혁명의 객관적 가능성과 그 절박성을 지시하는 것이지 자동붕괴의 임박함을 지시한 것이 아니

다. 당시 자본주의는 수천만 명을 살육한 제2차 대전 같은 파국적인 야만을 거쳐서만 오직 전후호황 같은 일시적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걸 가지고 자본주의의 역동성이니 혁신 능력이니 자기조절 능력이니 하면서, '제국주의 단계의 사멸하는 자본주의'를 파국론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얼마나 속물적인가. 사후적으로 자본주의의 소생과 장기호황만 볼 뿐, 그러한 결과를 가능케 한 당시 계급투쟁의 패배와 파시즘의 승리, 제국주의 세계대전 등과 같은 야만의 과정들은 보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속물적 태도는 '이기면 영웅이고, 지면 역적'이라는 식의 실용주의적 결과론에 불과하다.

레닌이 '자본주의의 최고 최후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론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제2인터의 파산을 선언하고 사회배외주의적 기회주의 및 카우츠키 중도주의(그리고 제국주의 초과이윤에 매수된 노동귀족)와의 비타협적인 정치투쟁을 통해 제3인터(코민테른)를 창설하려 한 사실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자동붕괴론 따위의 비난은 가당치 않다.

마찬가지로 트로츠키가 이행강령을 제출하고 제4인터를 창설하여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려 한 것도 다름 아닌 '자본주의의 단말마적 고통'이 자동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단말마적 고통 속에 있는 자본주의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사회주의혁명이 없다면 그 고통이 모두 인류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전가가 바로 수천만 명을 살육한 2차대전 아니었던가.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고 사회주의혁명을 가능케 했다면 그러한 2차대전 같은 야만은 없었을 것이다.

현 위기 → 세계화 시기 → 제국주의 시대

그러면 다시 현 위기로 돌아와서, 이 현 위기가 쇠퇴하는 자본주의, 사멸하는 자본주의와 어떤 연관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자. 올해 상반기 사노위 강령 논쟁 당시 사노위 다수파는 현 위기에 대해 그저 "이윤율 하락으로 인한 과잉축적 위기"라는 형식적 규정만 되뇌일 뿐 자본주의 역사 및 자본주의 발전 단계(자유경쟁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바의 독점자본주의 단계) 속에 이 위기를 자리매김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이윤율 하락/과잉축적 위기는 사실 위 3개의 대위기만이 아니라 모든 순환적 공황(소위기)의 공통적인 본질이다. 예를 들어 2001년의 IT 공황(닷컴 공황; 인터넷 공황)이나 1994년의 채권시장 대폭락 공황도 그 밑바탕에는 모두 과잉축적 위기가 깔려 있었다.

그러나 현 위기가 이러한 단순한 순환적 공

황과 달리 "1930년대 세계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인 것은 그냥 과잉축적 위기가 아니라 '역사적 · 구조적' 과잉축적 위기[1]이기 때문이다. 즉 각각의 순환적 공황들 속에서 충분히 청산되지 못한 과잉축적 자본이 매 순환을 거쳐 누적, 가중되면서 세계대공황의 양상으로 폭발하는 위기인 것이다.

따라서 현 위기에 대해 그냥 '과잉축적 위기다'라는 식의 앙상한 형식적 규정의 반복으로는 아무 구체 특수적 내용을 담지 못하는 추상적 원리 진술을 넘지 못한다. 원리 확인을 넘어 현 위기가 1973년-82년의 위기 및 그 이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기와 어떠한 구체 역사적 연관 속에 있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고유한 축적위기의 맥락 속에 현 위기를 위치지어야 한다.

우리는 〈〈혁명〉〉 창간준비 1호에 실린 〈현 국가부채 위기와 자본주의 체제 위기〉에서 1973년-82년의 위기 이후 현 위기 직전까지 이삼십년 동안의 세계화 시기에 어떻게 세계경제가 과잉축적과 이윤율 하락, 위기의 가중화 · 누적화 경향, 생산력의 정체 경향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위기에 빠져들었는지를 실물적으로 제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 바 있다.

"이와 같이 2008년-09년의 '대공황 이래 최악의 위기'는 앞선 자본주의 시기, 특히 세계화 시기에 축적된 모순의 결과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호황기(1948년-72년)처럼 1992년 이후의 새로운 세계화 시기도 거대한 생산능력의 파괴로 시작했다. 이윤을 가져올 수 없는 기업(특히 러시아와 중국의)이 폐쇄되고 심지어는 아예 폐기되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1939년-45년의 훨씬 더 큰 파괴와는 달리 세계화 시기의 시작 때의 파괴 과정은 과잉축적된 자본을 충분히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지 못했고, 세계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생산력 정체 경향을 들어내지도 못했다. 그리하여 1992년-2007년의 세계화 시기는 결코 세계적 규모로의 생산력 발전이 지배적인 추세가 되는 자본주의 팽창기가 되지 못했다. 독일과 일본에서의 장기불황과 정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격렬한 가치파괴 공황,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미약한 회복 -- 미국 경제의 핵심적인 잉여가치 생산 부문들을 쇠퇴하는 상태로 남겨 놓은, 또는 매우 부진하고 완만한 성장세로 머무르게 한 그 미약한 회복 -- 을 고려할 때, 결론적으로 1992년-2007년의 세계화 국면은 1973년-92년 국면과 다르지 않게 여전히 생산력 정체 경향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기로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화 시기는 결코 상향 발전의 '장기파동' 국면이 아니다. 전후 호황이 종식된 1973년 이래 자본주의 체제를 괴롭혀 온 고질병인 구조적 과잉축적이 근본적으로 극복이 되지 못한 시기이다. 구 '제3세계'에 속한 신흥국들 및 중국에서 생산의 광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시기는 가장 발달한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경제를 구조적인 과잉축적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었다. 가장 발달한 경제들에서의 지배적인 추

1) 순환적 위기들을 관통하는 초순환적(meta-cyclical) 위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4개의 순환적 위기를 관통하는 초순환적 위기일 경우 대략 35년 주기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트로츠키가 제시한 '자본주의 발전 곡선'의 변곡점들도 이런 종류의 위기이다.

세는 여전히 정체 경향이었다.

세계화 시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번영'과 '역동성'을 보여준 시기이기는커녕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정립해 낸 제국주의 시대의 주 특징들(기생성, 독점, 부후화와 쇠퇴, 세계의 분할 및 재분할)이 확장되고 전면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레닌이 다음과 같이 정의한 자본주의의 최고, 최후 단계 -- 자본주의의 쇠퇴 및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시대 -- 에 속한 한 시기임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제국주의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하고 풍부한 정의로 시작해야 한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특수 역사 단계이다. 제국주의의 고유한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이다. 기생적인 또는 부후 쇠퇴하는 자본주의이다. 사멸하는 자본주의이다. 독점에 의한 자유경쟁의 대체가 근본 특징, 제국주의의 본질이다.'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분열〉]

이행 시대로서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적인 성격은, 자본주의가 생산력 및 생산의 사회화를 크게 높여냈기 때문에 이것이 부르주아적 생산관계와의 충돌 -- 너무 첨예하여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붕괴를 일정에 올릴(물론 영구적으로는 아니지만) 정도의 충돌 -- 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있다. 다시 한 번 인류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냐의 갈림길에 직면한다. 현재의 극적인 경제위기는 레닌 제국주의론의 타당성을 완전하게 확인해 준다. 끊임없이 진전되고 있는 생산의 사회화와 국제화는 자본주의가 역사적 퇴물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쇠퇴하고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생산력의 풍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레닌의 다음과 같은 규정은 지금 특히 옳다.

'왜 제국주의가 사멸하는 자본주의인지,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의 자본주의인지는 분명하다. 자본주의로부터 성장해 나온 독점은 이미 죽어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로의 그 이행의 시작이다. 제국주의에 의한 노동의 거대한 사회화는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시대는 무르익어서 썩어문드러져 가는 자본주의 시대, 즉 막 붕괴하려 하는 그리고 사회주의로의 길을 만들 정도로 충분히 성숙한 자본주의 시대이다.'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분열〉]

세계화 시기의 특수한 특징들이 우리 시대, 제국주의 시대, 자본주의의 최고 최후 단계의 본질적 특징을 제거할 수 없었다. 그렇기는커녕 제국주의 시대 내의 한 시기로서 세계화 국면은 쇠퇴하고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한으로까지 축적한 시기이다. 현 위기가 순환적 위기를 넘어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인 위기인 것은, 제국주의 단계의 최근 국면으로서의 세계화 시기에 이 누적되고 극대화된 모순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현 위기를 낳은 모순을 축적해 온 1992년-2007년의 세계화 시기에 대해 사노위 다수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자본주의 쇠퇴기에 속한 시기인가 아니면 상승과 역동성의 시기인가? 사노위 다수파는 현 위기를 세계화 시기라는 바로 직전의 자본주의 주요 역사 시기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제시하길 회피하고, 따라서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단계, 독점자본주의 단계 속에 현 위기를 위치지어 규정 내리기를 거부하고 있다. 사노위 다수파는 세계화 시기가 제국주의 시대의 주 특징들(금융 기생성, 독점, 부후화와 쇠퇴)이 확장되고 전면화 한 시기임을 부정한다. 개량주의자들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자기조절 능력에 바탕한 '세계화의 역동성'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못 취하고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량주의자들에게 세계화 시기는 생산력이 거대하게 발전한 '역동적인 기술 진보'의 시기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현 위기는 난데없이 터져 나온 위기이고, 당혹스런 위기이다.

자본주의의 쇠퇴와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

제국주의 시대/ 독점자본주의 단계를 부정하고, 따라서 사멸하는 자본주의(쇠퇴하는 자본주의)론을 거부하는 사노위 다수파로서는 이 자본주의 최고, 최후 단계에 속한 한 시기로서의 세계화 시기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현 위기를 '사멸하는 자본주의/ 프롤레타리아 사회혁명의 전야'라는 역사적 시대와 연관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을 위한 이행요구'를 혁명적 정세에서나 가능한 강령이라고 기각하고, '노동자 정방대 · 민병대', '노동자평의회', '봉기' 등의 강령 조항들을 "블랑키주의적 좌익맹동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사노위 다수파는 말로는 '자본주의 철폐'를 내걸고 있지만, 정작 그 철폐를 실천적 일정에 올려놓는 '쇠퇴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100년 동안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힐난하며 조롱한다. 자본주의가 그 동안 위기 속에서도 거듭 자기혁신 능력을 발휘해 위기를 해처나가며 발전해 왔는데 무슨 '쇠퇴'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사회주의혁명으로 이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숨통을 끊지 못한다면 100년을 넘어 앞으로도 계속 이 쇠퇴 · 부후화의 고통, 사멸의 고통, 자본주의의 단말마적 고통이 공황과 전쟁과 환경파괴의 재앙으로 온통 인류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래서 100년 전 일차대전 전야에 로자 룩셈부르크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를 제기했고, 트로츠키도 2차대전 전야에 이행강령을 제출하면서 인류의 위기는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로 환원된다고 말했다. 이들 당시의 혁명가들과 노동자계급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사회주의냐 야만이냐'의 문제, '인류의 위기/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 문제가 던져져 있다. '자본주의 철폐'를 강령으로 내걸고 있는 사회주의 조직이라면 "100년 동안 쇠퇴?" 같은, 자본주의의 자기혁신 능력에 대한 맹신에 기반한 조롱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온몸으로 싸안아야 한다.

자본주의는 한 때 자본들 간의 경쟁을 통해 생산력 발전을 추동했던 생산양식에서 20세기 초부터는 독점의 지배가 더 한층의 발전을 제약하는 경향을 띠게 된 생산양식으로, 즉 소멸기에 들어선 생산양식으로 되어버렸다. 끊임없이 진전되고 있는 생산의 사회화와 국제화는 자본주의가 역사적 퇴물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생적이고 부패 노후화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생산력의 풍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100년 동안 쇠퇴하고 있는 것은 이 썩어문드러져 가는 자본주의를 사회주의혁명으로 끝장내는 데 거듭 패배해서이다. 무엇보다도 1930년대 세계대공황 때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으로 숨통을 끊지 못해서이다.

현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고 개량주의로부터 대중지도력을 전취하는 혁명정당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자본주의의 쇠퇴는 100년이 아니라 그 이상 계속될 것이다. 생산력 발전이 성숙을 넘어 이제 썩어문드러져 가는 단계에 있는 쇠퇴하는 자본주의로 인한 인류의 위기는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로 환원된다! 말로는 사회주의혁명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의 역동적 적응능력을 신봉하여 혁명의 현실성을 보려 하지 않는 대기주의 · 추수주의와의 투쟁은 오늘날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혁명정당 건설투쟁에서 결코 부차적인 과제일 수 없다. 과거 레닌을 비롯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새로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건설을 위해 카우츠키 중도주의와의 비타협적인 정치투쟁을 거쳐야만 했던 것처럼.

레닌 〈〈제국주의론〉〉과 현 위기

자본론 1권이 발간되고 난 다음 50년 뒤에 레닌은 여러 차례 순환적 위기의 반복을 보고 나서 자본주의를 연구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들 반복의 누적적 효과로 인해 자본주의에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그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이다. 자본주의는 한 때는 자본들 간의 경쟁이 추동력이 되어 생산성과 사회 총생산량의 전반적인 증가를 담보하는 생산양식이었다. 그랬던 것이 이제 독점의 지배가 더 한층의 발전을 제약하는 경향을 낳는 생산양식으

로 되어버린 것이다. ('자유경쟁' 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질적 전환). 이것은 모든 발전이 정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경쟁' 시대와 비교할 때 자본주의가 이제 그 역사적 쇠퇴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레닌이 이 〈〈제국주의론〉〉을 제1차 세계대전과 그에 뒤이은 혁명적 기간 동안에 썼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쇠퇴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혁명에 의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끝날 것으로, 또는 적어도 끝장 낼 수 있을 것으로 그가 기대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때 이후 거의 100년 뒤인 지금, 자본주의의 그 후 역사를 볼 때 그의 분석과 그의 결론은 틀린 것으로, 허구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는가? 1920년대의 혁명 운동의 패배가 제국주의의 살아남음을 허용했고, 제2차 대전에서의 거대한 파괴 규모가 체제에 새로운 생명 연장을 허용한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의 사태 전개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지시한다.

한 생산양식의 '쇠퇴'는 파멸적인 경향만이 아니라 그 생산양식 내에 다음 생산양식의 기초를 형성할 힘들의 발전 및 성숙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제국주의의 생명 연장은 불평등과 빈곤과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거대한 모순을 재생산했다. 훨씬 더 고도로 통합된 글로벌 경제/ 훨씬 더 고도로 사회화된 생산체제 對 훨씬 더 협소하게 집중된 사적 소유 사이의 훨씬 더 큰 모순을!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혁명의 전야

지난 1백 년 동안 우리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 및 증대하는 독점화에 의해 추동된 장기적인 정체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미국 헤게모니가 실추되고 전 세계적인 경제적 ·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명백히 이러한 결과들은 레닌이 제시한 제국주의 모델과 완전히 부합한다. 독점 부르주아지는 생산 단위 · 부문들을 지배하는데, 가장 선진적인 기술로, 최고도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으로, 그리고 이에 따라 가장 강력한 이윤율 저하 경향으로 지배한다. 이러한 과잉축적은 자본수출과 기생성, 그리고 주식, 부동산, '금융파생상품' 등의 투기를 추동한다. 가치 파괴 공황이 제국주의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세계의 분할 및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경쟁적인 투쟁을 격화시킨다. 민족국가들이 서로 가치파괴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그 희생을 경쟁 상대방 및 종속국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서로 밀치고 당기면서 충돌하고 있다.

세계화의 모순과 현 위기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옳음을 더 한층 입증하는 사례이다.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가 노동자계급에 대한 승리와 동구권의 최종 붕괴를 활용하여 세계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편할 수 있었다. 미국은 이윤율을 유지하고 제국주의의 고유한 정체 경향에 대처하고자 모든 "상쇄 조치들"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2007-09년 공황이 현재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역동성을 단지 일시적으로밖에 회복할 수 없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세계질서는 레닌의 모델에 닮아 있다. 당시 100년 전보다도, 그리고 50년 전보다도.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전망은 확실히 자본주의 체제의 증대된 불안정 및 '전쟁과 혁명의 시대'의 연속이다. 그러나 또한 레닌의 결론, "제국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혁명의 전야이다"라는 결론도 놓쳐선 안 된다. **혁명**

[자료] 사노련 항소심 결심공판, 오세철 교수 최후진술문

“사노련 활동, 맑스주의자의 역사적 책임과 사명”

오세철

항소심 처음 진술에서 나는 유죄판결을 내린 1심결과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넘어 다음과 같이 근본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첫째, 판결에 언급된 모든 준거가 사노련이 발간한 이론지, 신문과 책자에 실린 글에 한정되어 있어 앞으로 학교, 연구소 그리고 모든 사회운동단체가 발간하는 출판물이 광범위하게 공안기관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가장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

둘째, 국가 변란의 명백하고 실질적 위협이 된다는 증거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보안법” 취지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판결 선례를 남겼다는 사실.

셋째, 글 하나 하나를 유죄, 무죄로 재단함으로써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이 판결의 잣대가 되었고, 학술지에 실리는 이론적 논문까지 유죄로 판결하는 웃지 못 할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첫째, 사노련의 현장신문 둘째, 사노련 해산 이후의 개인 활동의 문건, 셋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이론적 논문 등을 포함시켜 사노련과 관련 없는 활동에서 발표한 글들이 사노련 재판

의 증거자료가 되어 검찰의 기소와 항소가 개인들의 표적 수사였음이 명백해졌다.

항소심은 단순한 상급심이 아닌, 시대착오적 검찰의 기소에 부분적 타협을 한 1심의 판결을 뒤집는 근본적 변화를 이룩하는, 사상 표현의 자유와 그 실천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명사회의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이어야 한다고 우리 모두는 생각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자본주의 위기가 필연적이고 인류를 야만과 전쟁으로 몰아넣고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사노련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위기가 국가 부채, 저성장, 양극화, 실업과 정리해고, 질병과 영양실조 등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기적 처방이 긴축재정, 유동성 공급, 복지 축소로 나아가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공격으로 이어져 인간답게 살려는 노동자의 몸부림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노동자 투쟁, 영국 젊은 세대의 폭동, 칠레의 공공교육투쟁, 이스라엘의 대중투쟁,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 혁명,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독일의 노동자 투쟁,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의 노동자 투쟁, 우리나라에서의 한진중공업 등의 정리해고 반대투쟁, 현대자동차, 재능교육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최근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필연적 흐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와 근본적 모순은 자본주의가 인류를 구원하는 사상과 제도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끊임없는 과학적 분석과 실천적 증거를 공개적으로 알려,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화시켜 죽음으로 내몰고 있고 이를 벗어나는 투쟁이 피할 수 없음을 노동자들이 깨닫게 하는 것은 맑스주의자의 역사적 책임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그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해방된 삶을 누리기 위한 싸움에 함께 연대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도 더욱 중요한 맑스주의자의 사명임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사노련과 같은 조직을 만들고 실천한 우리들의 주장과 활동은 오히려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지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더더욱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일 앞으로도 이러한 사상 표현과 실천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잣대로 재단하려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에 맞설 것이고 뒤로 물러나 움츠려 들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말하고 그 체제의 유지를 위해 실천하는 모든 세력은 노동자 민

중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자신들과 사상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대립하는 맑스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들과 경쟁하고 노동자 대중에게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직 역사의 심판과 노동자 대중의 자발적 선택만을 바랄뿐이다.

자본주의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만의 체제를 넘어서는 인류의 희망, 곧 자유로운 개인이 연합하는 노동해방사회임을 확신하면서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 그 사회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혁명**

혁명의 광고

동지들! 함께 투쟁합시다!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과 함께 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치활동을 통해 반드시 노동자혁명당을 건설할 의지가 있는 동지들은 아래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에 대한 소극적인 반대를 넘어
자본주의 세상을 끝장내기 위하여
혁명의 깃대를 굳게 움켜 쥐고, 붉은기 높이 듭시다!
노동자계급의 권력을 쟁취하여, 착취와 억압 없는 세상으로 전진합시다!
동지들! 더 이상 머뭇거림을 멈추고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힘차게 함께 합시다!

[후원 및 정기구독 계좌]

우리은행 1002-735-860549 (오세철)

(반드시 저희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신 후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신청 및 독자기고]

E-mail : wrp@jinbo.net

전화번호 : 02) 6348-8318

(신청하시면 답메일을 드리거나 전화통화하여 구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blog.jinbo.net/wrp

혁명 창간준비 3호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발행하는 ≪혁명≫은 사회주의자들 선진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 지도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량주의자들과의 지도력 다툼에서 유용한 무기로 복무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현실의 모순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노동자계급 해방투쟁 승리의 전망을 밝히는 살아 있는 정치선동의 무기가 되고자 합니다. 노동자계급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공급하고 계급투쟁의 당면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열린 토론과 논쟁의 장을 만드는 데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기다립니다."

– 편집자 글 '≪혁명≫ 창간준비호를 내며' 중에서 –

가칭)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